

초국가주의 민주주의 평화사상과 지역공동체의 추구 및 분단극복 정책 :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과 김대중의 햇볕정책의 비교사적 연구*

노 명 환**

차 례

- I. 머리말
- II. 초국가주의 민주주의 사상과 동방정책 그리고 햇볕정책의 이론적 구조와 지향점
- III. 지역공동체의 추구하고 분단극복 실현을 위한 동방정책과 햇볕정책의 추진
- IV. 맺음말

<국문요약>

본고에서 필자는 빌리 브란트와 김대중, 두 인물의 가치 지향점인 자유, 평화, 민주주의의 사상과 그 실현 정책으로서 동방정책과 햇볕정책을 비교사적으로 고찰하였다.

빌리 브란트는 독일문제를 유럽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유럽 전체의 통합과정 속에서 독일 통일이 달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유럽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독일이 과거청산을 철저히 하고 새로운 노력을 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 과거청산의 구체적인 표현이 독일이 온전히 민주화되는 것이었다. 분단된 결과로서의 두 개의 독일은 서로를 인정하고 민주주의를 향해서 민주주의 아래서 화해·협력·교류해야 했다. 이러한 과정이 서독과 서유럽을 더욱 민주주의 심화로 이끌고 동독을 그리고 동유럽 사회를 변화시키리라 생각했다. 여기에서 그는 유럽의 평화, 새로운 유럽 새로운 독일, 통일된 독일의 미래를 내다보았다. 이것이 그의 동방정책의 핵심 내용이었다.

김대중은 동아시아·유라시아 공동체의 비전을 다듬었다. 그는 이 가운데서

* 이 논문은 2011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 대학원 정보기록 관리학과 교수

남북한 관계의 개선과 평화통일의 미래를 내다보았다. 그는 또한 역으로 남북한 관계의 개선과 평화통일이 동아시아·유라시아 공동체 실현의 근본 조건으로 보았다. 분단된 결과로서의 두 개의 한국은 서로를 인정하고 민주주의를 향해서 민주주의 아래서 화해·협력·교류해야 했다. 이러한 과정이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리라 생각했다. 여기에서 그는 동아시아 지역 그리고 세계의 평화, 통일된 한국의 미래를 내다보았다. 이것이 그의 햇볕정책의 핵심 내용이었다.

동방정책이 실시된 토양으로서의 서독 사회와 햇볕정책이 실시된 토양으로서의 남한 사회 사이에는 여러 차이점들이 존재했다.

주 제 어 : 빌리 브란트, 김대중, 지역통합, 동방정책, 햇볕정책

I. 머리말

본고에서 필자는 빌리 브란트와 김대중의 대표 정책들인 동방정책과 햇볕정책을 비교와 관계의 관점에서 조명하고 자 한다. 이 두 정책은 많은 공통점을 보인다. 기존의 연구들은 햇볕정책이 동방정책의 영향을 받아서 공통점이 있다고 본다. 이러한 시각에는 분명 사실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두 사람에게 내재하는 가치관과 정치사상의 공통점이 두 정책 사이의 공통점을 가능하게 했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이 공통점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두 사람의 가치관과 사상적 지향점의 공통점을 조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필자가 보기에 그들의 정책에는 각각 그들의 삶의 과정에서 형성된 가치관과 사상적 지향점이 녹아들어 가 있다. 이것들이 정책의 목표와 성격 그리고 결과에 대한 일관된 체계를 형성했다. 그들의 가치관과 사상적 지향점이 이 두 사람의 정책 구상 및 발상의 방식, 목표 설정, 실현을 위한 추진 방식들에서 공통적으로 투영되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서로 공통점을 이루는 두 사람의 가치관과 사상적 지향점이 동방정책과 햇볕정책에 각각 어떻게 농축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러면서 두 정책의 영향관계 그리고 두 지도자의 교류 및 관계가 어떠한 파급효과를 일으켰는지를 고찰해 볼 것이다.

독자들이 본문을 읽기 전에 빌리 브란트와 김대중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점들에 각자의 생각을 모을 수 있도록 필자는 다음의 사항들을 열거해 본다. 빌리 브란트와

김대중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역사와 분단국의 지도자로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두 사람은 자신의 국가의 분단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지역평화와 세계평화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뜻을 가졌다. 두 사람은 자신의 민족과 국가에 대한 애정을 두텁게 가지지만 또한 동시에 초국가주의 사상(supranationalism)¹⁾을 지녔다. 그들은 자신의 민족과 국가에 대한 사랑을 보편적 인류에 속에서 세계 평화와 공동의 번영을 이루게 하는 초석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자신의 국가들이 분단되어 있는 냉전체제에서 이들은 조국애와 초국가주의 사상을 가지고 지역 내의 평화 정착을 실현해야 할 이상의 목표로 설정하면서 또한 동시에 지역 내부 분단국의 비정상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상정하는 공통점을 보여 주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그들은 평화의 정착을 냉전체제 하에 있는 분단국의 자결권 확보와 적극적 및 주체적 역할의 증대 그리고 궁극적으로 분단 극복의 열쇠로 인식했다. 그러면서 분단 극복이 지역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통합을 더욱 견인하도록 하고자 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초국가주의의 이상과 기능주의적 전략을 동전의 양면 관계로 엮어서 자신들의 정책 목표를 추진하였던 것이다. 이는 이상과 현실의 조화가 그들 정책 발상의 핵심임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이들의 전기 작가들이 두 사람이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고 그것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세상에 대한 사랑의 열정으로 승화시켰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에 주목한다. 전기 작가들은 이러한 성장 과정과 삶의 자세가 이들을 정치에 투신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한다. 이 전기 작가들은 같은 맥락의 동기 구

1) 초국가주의는 초국가적 공동체에 국가의 주권을 양도한다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사상이다. 그러나 이것은 초국가주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상의 기능적인 측면이다. 초국가주의 이상은 본질적으로 세계에 평화와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것이다. 이는 정체성에 대한 의식의 전환을 피하고 각 정체성의 단위를 상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체성에 대한 의식의 전환이란 닫힌 정체성을 탈피함으로써 닫힌 정체성끼리의 충돌을 피하고 열린 정체성으로 민족과 국가를 넘어 공존과 평화를 실현하고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는 의식을 함양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닫힌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열린 민족주의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신념들과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의식을 강하게 가지는 사람을 우리는 초국가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 따라서 초국가주의 사상을 단지 국가 주권의 양도라는 관점에 따라 논하는 것은 제한된 의미의 기능주의적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필자는 다음 장에서 설명할 내용을 근거로 빌리 브란트와 김대중을 초국가주의 사상가로 분류한다. 빌리 브란트는 일찍부터 초국가주의 사상에 접했고 이를 자신의 사상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김대중은 생의 후반기에 초국가주의 사상을 접했고 이를 자신의 사상으로 정립해 가면서 동아시아, 유라시아 그리고 세계에서 실천하고 자 했다.

조에서 그들은 독일과 한국의 각각 분단이라는 어려운 운명을 지역과 세계의 평화에 이바지하는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질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필자는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통하여 이러한 시각이 매우 예리한 통찰력을 가진다고 판단한다. 두 사람은 모두 대학 진학을 못하고 독학을 해서 세계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사상가와 정치가의 경지에 이르고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공통점을 보여 주었다.²⁾ 그들은 진보적 사상을 가졌으나 자유와 민주주의를 결한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반공주의 자라는 공통점을 또한 지녔다. 그들은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복지가 사회체제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신념을 소유했다. 그들은 세계적 차원에서 자유, 민주주의 그리고 복지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민주화 투쟁의 경력이 국제적으로 그들 정책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큰 자산으로 작용했다는 공통점을 가졌다. 필자는 이러한 그들의 평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관과 사상적 지향점이 각각 동방정책과 햇볕정책의 기본 바탕이라고 보며 본고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비교와 관계의 차원에서 설명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공통점들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들을 면밀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들의 사상과 정책 자체에도 차이점들이 있었고 그들이 직면한 상황에는 또한 많은 사회 구조적, 역사적 차이들이 존재했다. 동방정책과 햇볕정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각각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바탕에 차이가 있었다.

II. 초국가주의 민주주의 사상과 동방정책 그리고 햇볕정책의 이론적 구조와 지향점

1. 빌리 브란트의 초국가주의 민주주의 평화사상과 동방정책의 의미

빌리 브란트는 1913년 극히 불우한 환경에서 탄생·성장하였으며 정치가가 되기

2) 1971년 빌리 브란트가 2000년 김대중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빌리 브란트는 1992년에 김대중은 2009년에 타계하였다.

이전에 반 나치 투쟁을 위해 망명생활 그리고 저항운동에 뛰어들어 투쟁하였다.³⁾ 제 2차 세계대전 후 나치체제를 종식하고 민주화된 서독 사회에서 그는 정치가의 길을 밟아 가기 시작하였다. 둘로 분단된 독일의 한 부분인 서독에서, 특히 동독의 중앙에 놓인 분단된 베를린의 한 부분인 서베를린에서 정치활동을 시작했다. 냉전시대 분단국 정치가로서의 여정을 시작한 것이다.

빌리 브란트는 반 나치 투쟁을 전개할 때에 나치 집권의 근본 원인을 민족주의에서 보았고 민족주의를 극복하는 정책으로 초국가주의 유럽통합 사상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민족과 국가만 잘되면 된다는 생각 혹은 자신의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라면 다른 민족과 국가는 어떻게 되어도 좋다는 태도가 제국주의와 식민지주의 그리고 파시즘 체제를 가능하게 했다고 보았다. 그는 같은 맥락에서 인종주의의 득세도 이해했다. 그는 이들 모두가 전쟁의 필연적 원인이 됨을 직시했다. 그는 또한 자신의 민족과 국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포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파시즘 독재 체제를 가능하게 했다고 보았다. 이런 차원에서 민족주의는 전쟁과 전체주의 독재 체제의 원인이었다. 그래서 그는 평화와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민족주의 가치관을 극복하고 초국가주의 이상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는 유럽통합 운동을 유럽의 민족주의, 제국주의 그리고 파시즘에 대한 반성의 산물로 인식했다. 그는 유럽통합 운동의 배경이 되는 초국가주의 사상에 깊은 이해를 표시하였는데 사람이 국가의 수단이 되는 제도가 아니라 국가가 사람과 인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신념을 지녔다. 통합되는 유럽이 바로 위의 가치들을 실현할 수 있어야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나치에 대한 저항시기인 제2차 세계대전 중 저항운동 기관지 기자활동을 하면서 영구평화의 방법으로서 민족주의를 극복한 초국가주의 유럽통합을 실현하여 유럽합중국을 건설해야 한다는 생각을 자주 기고하였다.⁴⁾

3) Gregor Schöllgen (김현성 옮김), 『빌리 브란트』 (서울: 빛살무늬, 2003).

4) 이러한 그의 입장은 1940년에 노르웨이어로 집필한 미출간 원고, 독일어로 *Die Kriegsziele der Grossmaechte und das neue Europa* (『강대국의 전쟁 목표와 새로운 유럽』)과 1944년에 노르웨이어로 집필한 미출간 원고, 독일어로 *Nach dem Sieg: Die Diskussion über die Kriegs- und Friedensziele* (『승리이후: 전쟁과 평화에 관한 토론』)에 잘 나타나 있다. 이들 원고들은 독일어로 번역되어 2000년부터 연방수상 빌리 브란트 재단이 발간하기 시작한 베를린 판본 빌리 브란트 시리즈로 출간되었다.

Claudia Hiepel, "In search of the most common denominator. Germany and the Hague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제2차 세계 대전 후 서독의 정치인으로서 그는 독일과 독일 국민은 민족주의의 과거를 철저히 청산하고 새로운 길을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새로운 길은 유럽과 세계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의미했다. 위에서 언급한 바 유럽통합은 평화와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자 한 것이기에 독일은 유럽통합 운동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야 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독일은 새롭게 태어나고 그 결과 분단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⁵⁾

그는 이러한 사상과 정책의 총화로서 동방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는데 그것의 핵심 내용은 우선적으로 서독과 서유럽에서 민주주의를 더욱 심화시키고 이러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동독과 동유럽에 전파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독일 연방공화국의 수상으로 취임한 후 첫 연방의회 연설 (1969년 10월 28일)에서 동방정책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그 맨 서두에서 “우리는 보다 많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려 한다.”는 내용을 선언하였다.⁶⁾ 그의 민주주의는 사람이 국가의 수단이 되는 제도가 아니라 국가가 사람과 인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신념에 기초했다. 그는 동독과 동유럽에 대한 전파를 제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실천하고자 하였다. 그는 이렇게 해서 동독과 동유럽의 전체주의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 장에서 설명하듯이 민주주의에 기초한 초국가주의 유럽통합은 서유럽에 국한되지 않고 전 유럽을 포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는 민주주의와 경제원리라는 관점에서 사회민주당 당원이지만 시장경제의 가치

Summit Conference 1969", *Journal of European Integration History*, Vol. 9, No. 2 (2003), pp. 63-81; Andreas Wilkens, "Westpolitik, Ostpolitik and the Project of the Economic and Monetary Union. Germany's European Policy in the Brandt Era (1969-1974)", *Journal of European Integration History*, Vol. 5 (1999), pp. 73-102.

5) Ilse Dorotee Pautsch, *Akten zur Auswärtigen Politik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München: Oldenbourg Wissenschaftsverlag, 2002), pp. 115-123; Werner Link, "Außen- und Deutschlandpolitik in der Ära Brandt 1969-1974", Karl Bracher and Wolfgang Jäger and Werner Link (eds.), *Republik im Wandel 1969-1974, Die Ära Brandt* (Stuttgart : DVA, 1986), p. 169; Gottfried Niedhart, "Revisionistische Elemente und die Initiierung friedlichen Wandels in der neuen Ostpolitik 1967-1974", *Geschichte und Gesellschaft* 28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8), pp. 233-266.

6) 그는 이 내용을 수상 취임 후 첫 정부선언에서 분명히 하였다. "Regierungserklärung des Bundeskanzlers Willy Brandt vom 28. Oktober 1969", Bundeskanzler-Willy-Brandt-Stiftung (eds.), *Berliner Ausgabe Band 6, Willy Brandt, Ein Volk der guten Nachbarn. Außen- und Deutschlandpolitik 1966-1974* (Bonn: 2005), pp. 236-246.

를 중시했다. 왜냐하면 그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와 제도에 의해서 작동되는 경제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공정한 시장원리에 의해 운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전체적인 계획경제는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 원리와 상충되기 쉬웠다. 시장경제 원리는 사회의 약자에 대한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사회 정의의 복지 공동체 철학 및 정책과 조화를 이루어야 했다. 그는 이러한 제도를 사회민주주의 정책의 관건으로 이해했다. 이러한 신념에서 그는 1959년 고데스베르크 프로그램 채택을 통해 사회민주당이 시장경제제도를 기초로 하는 강령을 받아들여 대중정당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⁷⁾ 그에게 있어서 민주주의는 자유와 인권 및 복지가 보장되는 사회 그리고 이러한 사회를 위해서 이러한 사회의 원리에 기초하여 운영되는 공정한 사회시장경제 체제를 의미했다. 이것이 우선 서독과 서유럽에서 견고히 뿌리를 내리고 동방으로 전파되어야 했다. 이 과정이 동독과 동유럽에 대해서 ‘접촉을 통한 변화’를 실현할 것이었다.

이 전과 과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그는 동독을 비롯한 동유럽의 나라들과 화해, 교류, 협력 정책을 펼쳐나가고자 하였다. 동독과 동유럽의 변화는 독일의 평화, 화해, 통일을 가능하게 해 줄 것이었다. 그런데 ‘접촉을 통한 변화’는 인위적인 정책이 아니라 공정하고 사회민주적인 시장경제 제도의 확산을 통해 가능하다고 그는 보았다.

2. 김대중의 초국가 민주주의 평화사상과 햇볕정책의 의미

김대중은 브란트보다 11년 늦은 1924년에 태어났다. 브란트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 성장한 것은 아니었으나 유복한 환경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7) 브란트는 사회민주주의자로서 반공주의 자였다. 그는 공산주의 사회가 자유와 민주주의가 없는 전체주의 사회라는 데서 문제의식을 가졌다. 거기에도 현실 공산주의 진영을 이끄는 소련은 민족주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한 문제의 대표적인 것을 그는 스페인 내전에서 겪었다. 스페인의 독립적인 공산당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소련의 지령에 의해 스페인 내전 가운데에서 좌익끼리 전쟁을 치르는 상황을 목격했다. 또 1939년 히틀러와 스탈린 사이의 비밀 공수동맹은 그로 하여금 위의 문제점을 다시금 실감하게 했다. 그는 사회주의는 자유와 민주주의에 기초할 때만 그 원래의 목적을 구현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강화시키면서 공산주의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키워갔다. 이러한 경험은 브란트로 하여금 급진 사회주의 운동과 결별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Gregor Schöllgen (김현성 옮김), *op. cit.*, pp. 72-77.

는 청년 실업가로 성공의 길을 열어 갔고 6·25라는 동족상잔의 전쟁을 경험하고 정치인이 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정치인이 되고 나서 민주화 투쟁에 뛰어들었으며 험난한 역경과 고난의 삶을 살았다. 이러한 김대중의 험난한 정치 여정은 빌리 브란트가 반 나치 민주화 투쟁을 끝내고 민주화된 서독에서 정치인이 된 것과 대조를 이룬다. 그는 1972년 유신체제가 성립되면서 망명길에 오르고 미국과 일본 등 망명지를 전전하면서 군부독재의 실상을 알리며 민주화투쟁을 전개해 나갔다. 납치, 가택연금 투옥 그가 치뤄야 할 대가였다. 유신체제의 붕괴와 더불어 들어선 신군부 독재의 1980년대를 거치면서 사형선고, 망명생활에 시달려야 했다.

김대중은 동족상잔의 전쟁을 경험한 분단국의 정치인으로서 분단 극복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민했다. 분단 극복책으로서 그는 민주주의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민주화되지 않고는 정치 사회 발전은 물론 경제발전도 없고 평화적 민족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남한 사회가 먼저 철저히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그 바탕에서 경제사회 발전을 이루면서 평화통일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선 민주화 후 통일’을 주창하였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빌리 브란트가 동방정책 실시의 선결 조건으로서 서독과 서방세계가 보다 많은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을 주창했던 것과 같은 논리라고 할 수 있다. 김대중의 이러한 주장과 활동은 당시 박정희 정부의 정책과 대립각을 세웠는데 박정희는 남한의 경제개발을 통한 힘의 우위를 통해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박정희는 ‘선 건설 후 통일’을 주장하였다.

그는 남한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부강해 지고 그러한 발전이 북한에게도 전해져서 통일이 되는 조국의 미래를 꿈꾸었다. 그는 남한 사회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통해 번영의 길을 가고 이를 북한에 전파시키는 통일정책을 생각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북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러한 그의 통일정책을 햇볕정책으로 명명했다.

처음에 그는 통일을 통한 민족국가의 완성과 민주화에 역점을 두었으나 점차 국가를 넘어서서 아시아 지역과 세계의 민주화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게 되었다. 그는 그 안에서 한국의 분단극복과 발전을 꿈꾸었다. 21세기에는 국가를 넘어서서 세계 공동체의 역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음을 그는 생각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그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과 지식·정보 사회의 출현으로 세계는 국경 없는 시민사회를

이를 수밖에 없음을 내다보았다. 자신의 민족만을 생각하는 닫힌 민족주의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음을 그는 직시했다. 1980년대 초 감옥 생활을 하던 그는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21세기를 ‘지구촌 시대’로서 ‘즉각적인 통신이 가능’해지는 시대로 내다보았다. 그러면서 그는 이 시대를 ‘세계시민의 시대’로서 ‘대량 이주로 모든 인종이 한 나라에 공존하는 시대’로 예측했다.⁸⁾ “민족주의는 교통과 통신의 발전이 민족 단위로 운영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능했던 발전 단계와 일치해서 일어났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세계는 달라지고 있다. 민족 단위의 경제로는 이러한 세계의 변화에 적응해 나갈 수 없다. 그동안 세계는 교통과 통신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것은 정보화 시대가 다가온 것이다. 거대한 양의 정보가 순식간에 전 세계로 전파된다.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세계 모든 나라의 정보를 순식간에 입수할 수 있게 되었다. 민족 단위가 아닌 세계가 하나의 단위가 된 시대가 온 것이다.”⁹⁾ 다음 장에서 설명 하듯 그는 이러한 지식·정보 사회의 기초위에 동아시아 및 유라시아, 세계 공동체 그리고 남북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디지털실�크로드 개념을 개발하여 그의 햇볕정책의 중요한 요소로 상정했다.

빌리 브란트가 나치의 과거 청산을 생각하면서 민족주의 문제점을 깊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민족주의를 극복대상으로서 보다는 세계시민 사회의 도래 때문에 민족주의가 도태될 것으로 보고 있다.¹⁰⁾ 그러나 김대중도 민족주의가 잘 못 방향을 잡을 때 전쟁과 군국주의 독재체제의 원인이 됨을 그는 인식했다. 예를 들어 그는 1999년 3월 18일 유럽들과의 한 만남에서 아래와 같은 언급을 하였다. “충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흔히 국가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를 충의 대상으로 하면 잘못하면 히틀러의 나치즘이나 일본의 군국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¹¹⁾ 그는 충성의 대상을 국가가 아닌 국민으로 설정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민주주의가 가장 중요함

8) 김홍균·한기홍, 『김대중, 희망을 위한 여정』 (서울: 고즈윈, 2006), p. 115. 그는 후에 1980년대 초 감옥생활을 하면서 앨빈 토플러의 ‘제삼의 물결’을 읽고 지식·정보 사회 출현의 의미를 깨닫고 큰 충격을 받았음을 밝혔다. 김대중, 『김대중 자서전 2』, p. 159.

9) 『코리아 타임즈』 1998년 11월 6일. ; 김홍균·한기홍, *op. cit.*, p. 111.

10) 브란트에 비해 김대중은 ‘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초국가주의 가치의 필요성을 더욱 크게 연계하고 있는데 이는 브란트가 1969년 수상이 된 시점에서는 ‘정보화 사회’가 시대의 이슈가 아니었고 거의 30년 뒤 1998년 김대중이 대통령이 될 때는 주요 이슈가 되어 있었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11) 김대중, 『김대중 자서전 2』, p. 165.

을 역설하고 있다. “총의 대상은 국민이어야 합니다. 헌법에서도 국민이 주권자입니다. 총의 대상은 바로 내 아내요, 남편이요, 자식이요, 내 이웃입니다. 그래서 총의 대상이 내 곁의 모든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곧 나의 임금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임금이 주권자였지만 지금은 백성이 임금이요, 주인입니다. 그래서 총을 바르게 하려면 민주주의를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¹²⁾ 이는 그가 사람이 국가의 수단이 되는 제도가 아니라 국가가 사람과 인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사상아래 전쟁의 원인으로서 민족주의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그는 브란트의 정치사상과 매우 유사함을 보여준다. 그는 세계적 차원의 민주주의 실현의 가치를 강조했다. 김대중은 민주주의를 초국가적으로 실현함으로써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졌다. “이제는 민주주의가 국경을 넘어서 이웃과 세계를 포함한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통신·교통의 발달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민주주의는 국민국가의 민주주의로부터 주변 국가들을 포함한 연방제 민주주의 그리고 전세계를 포함하는 세계적 민주주의, 이렇게 3중의 구조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EC를 거쳐 유럽연방의 정치적 통합까지 나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¹³⁾ 그는 다른 자리에서 “내 국민의 자유, 내 국민의 복지만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이제 한계에 온 것입니다.”¹⁴⁾

그는 사회제제의 성공여부를 민주주의의가 잘 수행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다같이 민주주의를 하면 성공을 하고, 민주주의를 안 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다 실패를 하였습니다.”¹⁵⁾ 이러한 그의 발상은 앞에서 언급한 빌리 브란트의 판단 ‘현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가 자유와 민주주의를 결여하고 있어서 문제’라는 인식과 매우 유사하다.

2001년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아세안+한중일 회의에서 ‘동아시아비전그룹’ 설립을 제안하면서 다음과 같은 민족주의 극복의 초국가주의 입장을 피력했다: “산업혁명 이후에 민족주의가 세계를 지배했으며, 민족주의가 열병처럼 번져 식민주의가 생겨났습니다. 식민지배에 대한 독립운동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하였습니다. 민족

12) *Ibid.*

13) 김대중, 『나의 길 나의 사상』 (파주: 한길사 1994), pp. 52-53.

14) *Ibid.*, p. 53. (1993년 강만길 교수와의 대담)

15) 김대중, "나의 사상을 말한다: 1992년 1월, 정운영 교수와의 대담", 『후광 김대중 대전집 4』 (중심서원, 1993), pp. 323-324.

주의 시대에는 경제단위가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는 것이 적합하여 민족주의가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통·정보·통신 등의 발달로 민족국가는 바람직한 경제 단위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등장으로 세계 경제는 국경선이 희박해지고 하나의 경제로 통합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동아시아에는 아직도 민족주의적 요소가 남아있으며, 상호 간의 감정과 국가 이익에 대한 고려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화의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되면서 경쟁과 협력의 관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이 절실히 필요합니다.¹⁶⁾

그는 햇볕정책에 의한 남북한의 통일을 추구하면서 이것을 위한 환경으로서 위에서 말한 초국가주의 철학에 의거하여 동아시아 및 세계의 공동체를 추구하였다.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은 이것을 위해 기여할 것이었다. 이것이 김대중의 지역공동체 추구하고 한국의 분단극복 정책이었다. 이것이 그가 지역공동체를 통일을 위한 수단으로 상정함을 보여준다. 그는 중국과 일본이 서로 패권 다툴하는 것을 경계하고 동아시아 공동체로 발전해 갈 때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 이룩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한반도 평화적 통일은 이러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했다. 그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게 되는 상황을 가장 크게 우려했다. 이러한 관점은 브란트가 냉전이 깊어지면서 동독의 소련에 대한 일방적인 종속이 심화되는 것을 우려하며 동서 유럽의 화해와 유럽 전체 공동체의 비전을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했던 것과 매우 유사하다.

김대중은 초국가주의 사상에 의거하여 지역공동체를 만들고 그리하여 지역의 이해를 조화시키면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북한에 전파하고자 했다. 이 전파과정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져야 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민주주의가 자유가 있어야 시장경제의 발전, 특히 다가오는 정보화시대에서의 성공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시장경제를 하게 되면 민주주의적 자유는 억제할 수 없게 됩니다.”¹⁷⁾ 그는 이러한 정책의 가치를 독일의 분단에서 통일까지의 현대사에서 확인했다.¹⁸⁾

16) 김대중, 『김대중 자서전 2』, p. 154.

17) 김대중, *op. cit.*, pp. 64-65 (1993년 강만길 교수와의 대담).

김대중은 브란트 정권하에서 추진된 동서 교류·협력·화해 정책과 동시에 서독의 민주사회, 튼튼한 경제, 우수한 사회보장제도가 동독 정권이 무너지고 동독 사람들이 서독을 향하도록 하는 원인이었다고 보았다.¹⁹⁾ 이것이 서독의 동방정책과 독일통일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임을 강조하였다. 1993년 도쿄납치 생환 20주년 기념 연설에서 “우리는 전쟁 범죄국가인 독일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보였던 통일을 그토록 급속히 이룩할 수 있었던 요인을 깊이 음미하고 배워야 합니다. 이미 말한 대로 그것은 무엇보다도 독일이 튼튼한 민주기반을 서독 내에 닦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동독인을 매료시켜 통일로 끌어들이었으며 동·서유럽의 신뢰와 지지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에게 더 이상 강조할 수 없을 정도의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²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서독의 동방정책은 김대중의 햇볕정책에 많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위에서 보듯 김대중이 동방정책을 모방해서 동방정책과 햇볕정책 사이에 공통점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브란트와 김대중 사이에 존재하는 가치관과 사상의 공통점이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김대중은 그의 정책의 가치를 독일의 경험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더욱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18) *Ibid.*, p. 145. 1993년에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북한이 세계경제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중국과 같이 시장경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조짐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의 김일성 주석은 중국의 경제발전을 굉장히 찬양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서방세계가 북한과 수교를 하고 경제적 투자를 하게 되면 북한은 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도 시장경제 체제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중국과 같이 됩니다. 경제가 바뀌면 정치도 사회도 급격히 바뀝니다.”; *Ibid.*, pp. 64-65 (1993년 강만길 교수와의 대담).

19) 채구묵, “한국통일을 위한 독일통일의 교훈”, 『한국사회학』, 제 30집 (1996년 겨울), pp. 841-871, p. 863.

20) 김대중, *op. cit.*, p. 242.

III. 지역공동체의 추구하고 분단극복 실현을 위한 동방정책과 햇볕정책의 추진

1. 빌리 브란트의 유럽통합 비전과 동방정책의 추진

빌리 브란트는 서베를린 시장으로 봉직하면서 이미 동방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다.²¹⁾ 1966년 12월 1일 서독 연방 정부 외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동방정책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당시 그는 기민당이 이끄는 기민당과 사민당으로 이루어진 대연정 정부의 각료였기 때문에 명백한 한계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그가 사민당과 자민당의 연립으로 가능하게 된 연방 정부 수상 직에 1969년 10월 21일 취임하면서 본격적으로 앞장에서 설명한 그의 신념 체계에 의거한 동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같은 해 1월부터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닉슨(Richard Nixon)이 이미 세계적 데탕트 정책을 실시해 오고 있는 것 또한 그에게는 적실한 호조건을 제공해 주었다. 본 장에서는 그의 정치철학의 결정체인 동방정책이 어떠한 메카니즘 속에서 어떻게 추진되었으며 어떠한 성격을 보여주었는지 살펴본다.

1) 사민당과 자민당의 연립정부 설립과 브란트의 동방정책의 추진

연립정부를 가능하게 한 사민당의 파트너인 자민당은 브란트의 동방정책 추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앞 장에서 설명하였듯이 동방정책의 핵심이 경제교류 협력에 의거한, 공정하고 사회민주주의의 시장경제 제도의 확산에 의거한 민주주의 가치를 동방에 전파하는 것이라 볼 때 자민당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대한 기능적인 역할을 이론과 실제에 있어서 제공했다.

자민당은 기업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며 기업인들과 많은 연계를 갖는 정당이었고 현재도 그렇다. 자민당은 분단이 시작되면서 동독은 물론 동유럽 지역과 교류를 통해 잠재적 시장을 확보하는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²²⁾ 이를 통해 또한 독일의

21) Wolfgang Schmidt, *Kalter Krieg, Koexistenz und kleine Schritte. Willy Brandt und die Deutschlandpolitik 1948 - 1963*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2001).

22) Clemens Heitmann, *FDP und neue Ostpolitik: Zur Bedeutung der deutschlandpolitischen Vorstellungen der FDP von 1966 bis 1972* (Sankt Augustin: Königswinter 1989);

분단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10년 가까운 기간 전부터 강력히 주장해 오고 있었다.

자민당은 1961년 서독 철강 기업들이 추진한 소련 시베리아로 부터 천연가스를 들여오기 위한 파이프라인 설치에 적극 동의하였다. 서독 철강 기업들의 파이프라인 재료와 설치 기술은 세계최고로 인정되어 소련은 서독 기업과 협력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아테나워는 이를 강력히 반대하였다. 그는 이것이 공산진영을 이롭게 하는 그리고 서독이 소련의 외교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그에게는 대 동유럽 무역 금수조치 (COCOM)를 취하고 있던 미국의 입장이 부담이었다.²³⁾ 당시 자민당은 아테나워의 기민당과 연정 상태였는데 두 당 사이에 깊은 골이 파여 가기 시작하였다.

자민당은 아테나워의 대 동방 강경정책과 일방적인 서방통합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동유럽과의 화해정책'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자민당 의원 솔베르 (Wolfgang Schollwer)는 1962년에 이미 할슈타인 원칙의 포기, 동유럽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수립, 동독을 주권국가로 인정, 오데르-나이세 강을 독일과 폴란드 사이의 국경으로 인정 등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동독을 포함한 동유럽 국가들과 적극적인 교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통일의 목표는 이러한 정책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장기적인 차원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²⁴⁾ 그는 동구권에 자본주의 방식을 투입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통일정책이라고 주장했다.²⁵⁾ 솔베르 의원의 관점은 사민당의 바르 (Egon Bahr)의 입장과 유사한 측

Meung-Hoan Noh, *Westintegration versus Osthandel. Politik und Wirtschaft in den Ost-West-Beziehung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49-1958* (Frankfurt a/M., 1995); Angela Stent, *Wandel durch Handel? "die politisch-wirtschaftlichen Beziehunge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Sowjetunion* (Köln: Verlag Wissenschaft und Politik, 1983).

23) Hanns-Dieter Jacobsen, *Die Ost-West-Wirtschaftsbeziehungen als deutsch-amerikanisches Problem* (Baden-Baden, Nomos-Verlagsgesellschaft: 1986).

24) Wolfgang Schollwer, *Der Weg zur Entspannung. Deutschlandpolitik der F.D.P. seit 1952* (Bonn, 1972).

25) Fritz Rudolf Schultz, *Texte zur Deutschlandpolitik (TzD) Bd. III, Begründung des FDP-Antrags für einen Vertragsabschluß mit der DDR*, pp. 191-205; 김진호, 『독일연방공화국의 동방정책과 동방무역 1969-1975. 데탕트 시기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과 대기업들의 동방무역 이해의 상호 관련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p. 136-144.

면이 많아 두 사람 사이의 접근이 이루어 졌다. 바르는 브란트의 최측근 참모로서 브란트와 함께 동방정책을 기안한 인물이었다.

이러한 진전은 사민당과 자민당이 연정 (Koalition)을 논의하는 상황에 까지 이르고 결실을 맺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자민당이 동방으로 기업인들의 경제 진출을 할 수 있도록 동서 경제 교류를 긴장완화와 독일통일의 최대 수단이라는 논리를 내세운 측면이 있다는 사실이다. 브란트와 사민당은 긴장완화와 독일통일이라는 목적을 위해 경제의 동서 간 교류와 협력을 수단으로 상정하였다. 물론 두 당 사이에 위와 같은 목적과 수단의 관계가 엄격하게 뚜렷이 구별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두 당이 어디에 더 강조점을 두었는가는 뚜렷이 드러났다. 두 당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연립정부는 동방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매우 유리한 구조적 조건을 확보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브란트의 동방정책 추진에 특별한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브란트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동방에 전파하는 정책은 자민당과의 만남에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 이러한 자민당의 역할은 그러한 역할이 없는 한국의 남한과 비교해 큰 특징을 이루었다. 이는 다음 장에서 설명하듯 햇볕정책이 실시되는 한국의 상황과 큰 대조를 이루는 한 측면이었다.

2) 브란트의 서독 내 민주화 개혁 정책과 서유럽 및 유럽 통합정책 그리고 동방 정책

앞장에서 설명하였듯이 브란트는 동방정책을 통한 독일문제 해결에 있어서 그 전제 조건이 서독의 민주주의를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민주주의를 심화시키는 것은 과거청산을 철저히 하는 것이며 그 연장선상에서 개혁입법들을 추진하였다. 신나치주의를 표방하는 정당 및 폭력혁명을 피하는 극단주의자들의 발호를 막아야 했다. 그는 극단주의자 처벌법이 제정되도록 하였다. 신나치당인 독일국가민주당의 발호에 대해 그리고 적군파 (Rotarmee Fraktion)의 문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야 했다. 여러 부면에서 복지제도를 대폭 강화하였으며 교육의 기회를 넓히고 질을 심화시키기 위한 여러 개혁정책들을 실시했다.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세계 개혁을 단행했다. 신공동결정법을 채택했다. 이는 기존의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공동결정법을 더욱 강화한 것이었다. 이러한 개혁 정책들은 극단주의자들의 발호를 잠재우는데 크게 작용하고 서독을 보다 민주적인 사회로 만드는데 기여했다. 1968년부터 시작된 소위 68운동에 대한 답으로서도 작용했다. 기존의 사회시장경제 체도를

사회정의 측면에서 강화하는 것이었고 동독을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사회로 보일 수 있게 했다.²⁶⁾

그러한 동시에 브란트는 동방정책을 실시했고 또한 당시 서유럽 통합에 국한되어 있는 유럽공동체(EC)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그는 프랑스의蓬피두(Georges Jean Raymond Pompidou)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했다. 달리 표현하여 그는蓬피두의 유럽 통합 리더십을 적극 지원하였다.²⁷⁾ 그가 수상으로 취임한 후 몇 개월이 지난 1969년 12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유럽공동체(EC) 정상회의가 열렸고 이 정상회의를 통해 그는 그의 지향점을 분명히 보여주고자 하였다.²⁸⁾ 이 회의에서 그는 EC의 공동 농업정책에 관한 프랑스 입장을 지지해주었다. 프랑스는 전 산업에서 농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나라로서 EC가 공동 농업기금을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공동체 내 농업 보조금 지급을 확대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는 서독에게는 불리한 정책 내용이었다. 농업의 비중이 적은 서독은 이 정책을 위해 기금은 많이 내고 보조금 혜택은 적게 받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공동 농업 정책에 관한 브란트의 프랑스 입장에 대한 지지는 그 의미가 컸다. 그는 유럽의 '경제 통화 동맹(EMU)'의 창설을 위해 적극적이었고 이를 통해 서유럽 통합을 제도적으로 심화시키고자 하였다. 브란트는 정치적으로 독립되고 경제적으로 강력한 서유럽은 미국과 소련 사이의 양극화 블록 질서를 막을 수 있으며 독일문제를 해결하

26) Karl Bracher and Wolfgang Jäger and Werner Link, *Republik im Wandel 1969-1974, Die Ära Brandt* (Stuttgart : Mannheim 1986), pp. 179-189 ; Gregor Schöllgen (김현성 옮김), *op. cit.*, pp. 170-180.

27) Wilfried Loth, "European Political Cooperation and European Security in the policies of Willy Brandt and Georges Pompidou", Jan van der Harst (eds.), *Beyond the Customs Union: The European Community's Quest for Deepening, Widening and Completion, 1969-1974* (Bruxelles, 2007), pp. 21-34; Wilfried Loth, "Détente and European Integration in the policies of Willy Brandt and Georges Pompidou", N. Piers Ludlow (ed.), *European Integration and the Cold War. Ostpolitik-Westpolitik, 1965-1973* (London and New York, 2007) pp. 53-66. ;브란트가 이러한 측면을 위해 얼마나 섬세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는 그가 동유럽 국가들과 본격적으로 대화를 시작하기 전 1970년 1월 프랑스 대통령蓬피두와 행한 회담 내용에서도 잘 나타난다. Aus der Aufzeichnung über das Gespräch des Bundeskanzlers, Brandt, mit dem französischen Staatspräsidenten, Pompidou 30. Januar 1970, AdSD, WBA, A 9, 30, Bundeskanzler-Willy-Brandt-Stiftung (eds.), *Berliner Ausgabe Band 6, Willy Brandt, Ein Volk der guten Nachbarn. Außen- und Deutschlandpolitik 1966-1974* (Bonn, 2005) pp. 268-277.

28) Claudia Hiepel, *op. cit.*, pp. 63-81.

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²⁹⁾ 영국 등 새로운 회원국들을 받아들여 EC를 확장시키는 노력에서도 활발한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영국의 가입에 소극적이었던 프랑스를 설득하였다.³⁰⁾

브란트는 EC의 질적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개발하여 실시하는데 앞장섰다. 그는 EC 내 낙후된 지역의 지원을 위한 지역정책(Regional Policy), 공동의 환경정책, 사회정책, 에너지정책 등 EC의 여러 공동 정책들을 수립하는 데 힘썼다.³¹⁾ 이는 “우리는 보다 많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려 한다.”는 그의 취임 후 첫 정부선언에서 밝힌 정책 기조와 일치되는 민주개혁의 일환이고 공동체의 조화를 심화시키는 정책이었다. 서독 내에서 그가 추진한 민주주의 개혁들과 비견되는 EC내의 민주주의 확대 정책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는 EC의 초국가주의적 요소를 강화시키고 통합의 심화 (deepening)와 확장 (widening)을 꾀하였다.³²⁾ 이러한 그의 노력은 서독을 서유럽에 강력히 통합시키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했다. 따라서 브란트의 이러한 활동은 그의 동방정책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떼지 않는 서방 세계를 어느 정도 안심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는 특히 동방정책에 대해 일면 불안감을 갖고 있는 미국의 닉슨 정부를 어느 정도 안심시키는 데도 크게 역할을 하였다. 그는 1970년 4월 10일 미국 National Press Club에서 그의 외교정책에서 미국과 서독의 관계가 최우선순위라고 선언했다.³³⁾ 그는 동방정책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미국, 프랑스 등 동맹국들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였다.³⁴⁾

29) Andreas Wilkens, *op. cit.*, pp. 73-102; Claudia Hiepel, "Willy Brandt, Georges Pompidou and Europe. Das deutsch-französische Tandem in den Jahren 1969-1974", Franz Knipping and Matthias Schönwald (eds.), *Aufbruch zum Europa der zweiten Generation. Die Europäische Einigung 1969-1984* (Trier: Wissenschaftlicher Verlag Trier, 2004), pp. 28-46.

30) 이러한 브란트의 입장은 영국이 EC에 가입되기를 원했던 미국의 바람에 부응했다.

31) Desmond Dinan, *Europe Recast. A History of European Union* (Boulder and London 2004), pp. 145-154.

32) *Ibid.*, pp. 126-127.

33) *Archiv der Gegenwart*, Vol. 40 (1970), p. 15413.

34) 이에 대해서는 닉슨과의 편지교류 참조, 예를 들어, Schreiben des Bundeskanzlers, Brandt, an den Präsidenten der Vereinigten Staaten von Amerika, Nixon 22. März 1970 (NARA, Nixon Presidential Materials Staff, NSC, 1969-1974, Presidential Correspondence 1969-1974, Box 753), in Bundeskanzler-Willy-Brandt-Stiftung (eds.), *op. cit.*, pp. 288-289.

그러면서 그는 서유럽통합이 유럽전체의 통합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확신했으며 그렇게 실현되도록 정책방향을 잡고자 하였다. 그는 외무부 장관 시기에 이미 이러한 입장을 명료하게 표출하였다. “통합을 통해 강력해진 서유럽 국가들은 동유럽 국가들과 대화를 자신감 있게 펼쳐나가야 한다. 서로의 제도의 차이를 뛰어 넘어서 함께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유럽 전체의 협력과 통합은 우리 시대의 요청이며 누구도 이를 거부할 수 없다.”³⁵⁾ 그는 이러한 서유럽 통합의 심화 그리고 장기적으로 유럽 전체의 화해와 통합으로의 길은 독일 분단의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았다. “오로지 전 유럽적인 차원의 재결합만이 독일의 분단된 두 진영을 서로의 결합을 위해 움직이게 할 수 있을 것이다.”³⁶⁾ 달리 그는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전 유럽적 차원의 화해는 독일을 제외하고 이루어질 수 없다. 이 과정은 반드시 독일(두 독일의 화해를) 포함하게 될 것이다.”³⁷⁾ 그는 평화로운 유럽의 틀 안에서 동독과 서독이 이념적 차이를 넘어 대결을 지양하고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이해 및 평화를 일구어가면서 장기적으로 하나의 민족으로서 분단을 극복해야 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그는 다음 절에서 보듯이 서유럽통합이 유럽전체의 통합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기구와 조직들을 활용하였다.

그가 일찍이 반대당인 집권 기민당 소속의 아데나워의 서유럽통합 정책에 동의했던 배경도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그가 속한 야당인 사민당의 슈마허(Kurt Schumacher)와 다른 지도자들은 아데나워의 서유럽통합 정책에 반대했다. 그들이 보기에 그것은 독일과 유럽의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것이었다. 물론 브란트가 이러한 상황에서 아데나워에 동의한 것은 궁극적으로 서유럽통합은 유럽 전체의 통합을 지향해야만 한다는 전제에 의거했다. 브란트는 독일의 나치과거에 대한 철저한 청산과 새로 태어남을 유럽 평화체제 구축의 전제로 삼았고 유럽통합은 그 기반 위에 실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역으로 그는 또한 이러한 기반 위에서 전후의 독일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서독이 과거 청산 차원에서도 분단 현실을 받아들이고 서유럽통합에 충실하며 이 가운데 독일이 새로 태어나는 노력을 경주하고 그 가운데서 유럽 전체의 통합에 기여해야 했다. 그는 그 과정 속에서 독일

35) Willy Brandt, *Friedenspolitik in Europa* (Frankfurt a.M.), p. 78.

36) Willy Brandt, *Willy Brandt Erinnerungen* (Frankfurt a.M., Zürich, 1989), p. 194.

37) Willy Brandt, *Friedenspolitik in Europa*, p. 18. (괄호 안은 본 논문 필자의 보충)

분단이 극복되는 것을 상정했다. 그에 의하면 유럽 국가 간의 모든 문제는 유럽적인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유럽의 통합과 독일의 분단 극복은 동전의 양면 관계와 같은 차원에 있다고 보았다.³⁸⁾ "유럽인들이 유럽의 정체성을 보존해야 한다. 이것은 유럽 대륙에게 커다란 미래를 열어줄 것이다. 더 이상 각국이 고립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유럽적인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³⁹⁾ 브란트는 독일과 폴란드의 관계도 양 국가의 차원에서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다.⁴⁰⁾ "유럽 차원의 평화체제 구축은 독일의 생활 이해 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미래의 길을 열어 가는 것이다."⁴¹⁾

3) 복잡다기한 동방정책의 추진과 성과

동방정책을 추진하면서 그는 구체적으로 우선 서베를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당시까지 동독 안에 위치한 서베를린과 서독 사이에는 자유로운 교통왕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았다. 서베를린 주민들은 소련과 동독에 의한 서베를린 봉쇄로 인해 몇 차례 심대한 고통을 받았다.

당시까지 서베를린은 제도상으로 서독의 일부로서 인정되어 있지 않았다.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의 전승 4개국이 서베를린을 통제하고 있었다. 따라서 서베를린 사람들은 항상 큰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야 했다. 서베를린 시장을 역임한 브란트는 누구보다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 브란트는 전승 4개국의 협정을 통해 서독과 서베를린 사이의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고 서베를린이 서독에 공식적으로 귀속되도록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소련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했다. 왜냐하면 서방 동맹국들인 미국, 영국, 프랑스는 서베를린에 대한 브란트 방식의 해결에 대해 이미 이해와 견해의 일치를 보고 있었다.⁴²⁾ 그런데 소련은 동독의 입장을 고려해야 했다. 따라서 동서독 간의 관계 개선 없이 전승 4개국의 협의를 통해서만 서베를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동서독 간의 현안

38) Willy Brandt (translated by Joel Carmichael), *A Peace Policy for Europe* (New York, Chicago and San Francisco, 1969), 원본은 1968, p. 144-145.

39) Willy Brandt, *Willy Brandt Erinnerungen*, p. 213.

40) Willy Brandt, *Willy Brandt Erinnerungen*, p. 219.

41) Willy Brandt, *Friedenspolitik in Europa*, p. 22.

42) Bundeskanzler-Willy-Brandt-Stiftung (eds.), *op. cit.*, pp. 60-63.

들이 해결되고 관계가 개선되어야 했다. 그런가하면 서독과 소련의 관계개선 없이는, 소련의 역할 없이는 동서독 간의 현안들이 해결되기도 어려웠고 관계가 개선될 전망도 난망했다. 서독과 소련관계 그리고 동서독 간의 관계는 동전의 양면처럼 얽혀있었다. 이렇게 얽힌 실타래를 종합적으로 푸는 것이 그의 동방정책의 내용이였다.⁴³⁾

동독은 당시에 이미 적화통일이라는 목표를 포기하고 분단을 영구화 하면서 동독 자체의 국가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동독을 독립된 주권국가로 만드는데 노력을 집중시켜 오고 있었다. 동서독 간 교류 협력이 동독의 이러한 입장과 체제를 약화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독의 지원 및 교류 협력을 절실히 필요로 했다.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동독은 서독이 동독을 주권 국가로서 확실히 인정하게 하고 경제교류를 제한적으로 실행하고자 하였다. 국제법상으로 동독을 주권국가로 인정할 것 그리하여 구체적으로 현 동서독 국경을 불가침으로 하고 동서독 대사를 교환하며 유엔 동시 가입을 주장했다. 동독은 서베를린을 독립적인 정치지역으로 설정하고자 하였다.⁴⁴⁾

브란트는 동서 간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러한 동독의 입장과 적극적으로 조율하고 양독 간에 경제 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브란트는 동독을 국제법상이 아닌 정치적으로 인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동서독 관계를 특수한 내독 관계 (Innerdeutsche Beziehungen)로 규정했다. 그래서 그는 대사 교환이 아닌 상임대표 교환과 유엔 동시가입을 제안하였다. 서베를린에 대해서는 자신의 기존 입장을 온전히 관철시키고자 하였다. 그는 할슈타인 원칙을 폐기하였다.⁴⁵⁾ 소련의 경우는 동독과 관련해서 동독을 주권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했고 다른 사항들은 협상될 수 있었다. 따라서 브란트는 동독과 대화를 계속 해나가고 그러나 소련을 통해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에게 동서 간 교류의 실질적인 물꼬를 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는 동서

43) *Ibid.*

44) Bundeskanzler-Willy-Brandt-Stiftung (eds.), *op. cit.*, pp. 63-67.

45) 빌리 브란트는 외무부 장관 시기부터 할슈타인 원칙을 폐기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가 수상이 되어 동방정책을 실시하면서 이 원칙이 폐기되었다. 할슈타인 원칙은 1955년 서독이 소련과 외교관계를 맺을 때 외무부 차관이던 할슈타인 (Walter Hallstein)이 소련을 제외한 어느 국가도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는 경우 서독은 그 나라와 국교를 단절하거나 맺지 않을 것임을 선언한 내용이다.

간에 단절이 깊어지는 속에서 동독을 비롯한 동방에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더욱 억압되고 동유럽 작은 국가들의 소련에 대한 종속이 심화된다고 보았다. 그가 보기에 각 국가 내부 사회는 물론 공산권 사회 전체가 폐쇄성을 더해 갔다. 그는 동서간의 교류 협력은 이러한 동방의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동서간의 교류 협력 속에서 동독의 소련에 대한 일방적인 종속을 완화시키고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가 동방으로 전파될 수 있었다. 이 교류 협력에서 가장 큰 분야는 경제영역이었지만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 사람들의 왕래 언론 및 정보의 교환 교통 통신 등 인프라의 확대가 또한 중요했다. 그런데 이 물꼬는 소련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터질 수 있었다.⁴⁶⁾

브란트는 1970년 3월19일 Erfurt에서 그리고 같은 해 5월 21일 카셀 (Kassel)에서 동독 수상 스토프 (Willi Stoph)를 만났다. 에어푸르트 (Erfurt)를 방문했을 때 브란트는 동독 주민들로 부터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이를 통해 감정적으로는 많이 고양되었으나 스토프와의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다.⁴⁷⁾ 대화의 어떤 진전을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었다.

동방정책을 위해 또한 중요한 국가가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였다. 폴란드는 서독과 무력사용 포기를 확약하고 경제·기술 측면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폴란드는 우선적으로 서독과 과거사 청산을 매듭짓고자 하였다. 독일 나치가 폴란드를 점령하여 자행한 만행과 유태계 폴란드인의 학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었다. 그리고 핵심의 안건으로 제 2차 세계대전 후 동독과 폴란드 사이에 새롭게 형성된 오더-나이세 선을 국경으로 영구히 인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브란트는 폴란드의 요구조건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것이 그의 동방정책의 출발점이고 내용이기도 했다. 다만 오더-나이세 선을 국경으로 인정하는 행위는 독일 동부 영토의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서독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이 대두되었고 이들을 설득해야 하는 것이 그의 숙제였다. 특히 이 지역으로부터 추방된 피난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경우는 1938년 맺어진 뮌헨협정을 파기하는 일이 주요 현안이었다. 뮌헨협정에 따르면 체코슬로바키아 주테텐 지역의 독일인이 독일에 합병되어

46) Bundeskanzler-Willy-Brandt-Stiftung (eds.), *op. cit.*, pp. 43-47.

47) Vermerk des Bundeskanzlers, Brandt, über das Gespräch mit dem Vorsitzenden des Ministerrates der DDR, Stoph 19. März 1970, AdsD, WBA, A 9, 22, Bundeskanzler-Willy-Brandt-Stiftung (eds.), *op. cit.*, pp. 281-288.

야 했다. 따라서 뮌헨협정의 파기는 주데텐 지역에 대한 포기, 즉 그곳 독일인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 또한 브란트가 과거청산과 유럽의 새로운 질서의 주요 내용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었다.

브란트는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풀고자 하였다. 그 종합적인 해결의 열쇠는 소련과의 협상에 달려있었다. 그는 소련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협상해야 했다. 소련은 브란트가 천명한 동방정책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 소련은 서독의 기술과 소련의 천연자원을 접목하는 교류·협력을 통해 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소련은 시베리아 천연가스를 서독의 기술을 통해 개발하여 판매하고 서독의 산업물자를 수입하고자 하였다.⁴⁸⁾ 소련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 프랑스, 영국과의 교역은 제한적이었다. 이를 활성화시킬 지렛대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서독은 분단국가라는 입지 때문에 소련이 정치적 지렛대를 작용시킬 수 있었다.

소련은 당시 냉전체제의 현상 (status quo)을 유지하면서 동구권 내에서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주요 외교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었다.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 사태 이후 그 필요성을 더욱 절감했다. 이를 위해 그리고 이 기반 위에서 소련은 미국과 데탕트 정책을 실시하며 유럽의 동과 서를 아우르는 집단안보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또한 서유럽이 미국과 거리를 갖도록 만들하고자 하였다.

소련의 이러한 태도에는 중국과 이루어지고 있는 공산권내 헤게모니 경쟁도 큰 역할을 했다. 특히 1969년 3월 중국과의 국경지대인 우수리 강 지역에서 발생한 군사충돌은 소련으로 하여금 ‘중국위협’을 크게 느끼게 하였다. 그런데 소련이 동유럽권에서 리더십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서독의 역할이 중요했다. 그것은 서독이 동독을 주권국가로 인정해 주고 동독과 폴란드 사이의 오더-나이세 선을 영구적인 국경으로 합의해 주는 것이었다. 소련이 서독과의 협상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될 때 소련은 동방 (동구권)의 리더로서 자리를 확고히 할 수 있고 대 서방 화해정책에 대한 지지도 얻을 수 있었다.⁴⁹⁾

48) 브란트 정부시기에 시베리아로부터 서유럽으로 오는 가스관이 서독 기술에 의해 설치되었다. 앞부분에서 설명하였듯이 아데나워가 반대하여 이루지 못한 것을 자민당은 브란트 사민당과 함께 실현할 수 있었다.

49) M.E. Sarotte, "Take No Risks (Chinese): The Basic Treaty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Relations", David C. Geyer and Bernd Schaefer (eds.), *American Détente and German Ostpolitik, 1969-1972* (Washington DC: German Historical Institute, 2004).

그런데 이러한 서독의 역할은 브란트 정부가 아니면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소련은 브란트 정부에 각별한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브란트 정부로서도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브란트 정부의 정책에 국민들이 격렬히 반대하여 브란트 정부가 실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련은 브란트 정부와 그의 동방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하고자 하였다. 그 중 대표적인 예로 소련은 브란트가 요구하는 방식의 서베를린 문제 해결을 지지하고 서독이 동독과의 관계에서 가시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였다.⁵⁰⁾ 소련은 서독의 동방정책에 대해 강경한 입장의 울브리히트 (Walter Ulbricht)로부터 보다 유연한 호네커 (Erich Honecker)로 공산당서기장이 바뀌도록 동독에 압력을 가하기까지 했다. 이 교체는 1971년 5월 3일 이루어졌다. 이러한 추세에서 동독은 동방정책을 피하기 어려웠다.⁵¹⁾ 소련은 서독이 서방동맹 국가들과 갖는 입지와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주고자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독과 소련이 동방정책 관련 결정적인 협상 파트너가 될 수 있었다.

브란트 정부에서 수상부 장관이 된 바르 (Egon Bahr)와 소련 외상 그로미코는 1969년 10월부터 협상을 시작하여 10개항의 합의문을 담은 소위 ‘바르문서’를 1970년 5월 완성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서독과 소련 사이의 경제교류를 활성화 할 것을 합의하였다. 동서 진영 간에 어떠한 무력 사용도 불허하며 서독이 동독과 조약을 맺어 동독을 국제법상이 아닌 정치적인 차원에서 주권 국가로 인정하고, 동서독의 현 국경을 인정하며, 동서독 간 상임대표를 교환하고 유엔에 동시가입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서베를린 문제를 브란트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하였다. 서독이 폴란드와 조약을 맺어 폴란드와 독일 간에 오더-나이세 선을 영국 국경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서독이 체코슬로바키아와 새로이 조약을 맺어 뮌헨협정을 폐기하기

50) 이에 대한 자료로는 Niederschrift über ein Gespräch zwischen dem Generalsekretär des ZK der KPdSU, Genossen Leonid I. Breschnew, und dem Mitglied des Politbüros des ZK der SED und VdM der DDR, Genossen Willi Stoph, am 21.3.1973 im Kreml von 11:00-13.15 Uhr," 4, in SAPMO-BA, DY 30, formerly "Sonderablage Stoph", DC 20-4415; M.E. Sarotte, "Take No Risks (Chinese): The Basic Treaty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Relations", David C. Geyer and Bernd Schaefer (eds.), *American Détente and German Ostpolitik, 1969-1972* (Washington DC: German Historical Institute, 2004), p. 114. Sarotte는 동서독 기본조약은 소련과 중국 사이의 불화의 덕이라고 까지 주장한다. *Ibid.*, pp. 109-117.

51) Bundeskanzler-Willy-Brandt-Stiftung (eds.), *op. cit.*, pp. 61-62.

로 하였다.⁵²⁾

이 합의문은 1970년 8월 12일에 체결된 모스크바 조약의 기초가 되었다. 이에 근거해서 같은 해 12월 7일 서독과 폴란드 간 바르샤바 조약이 체결되었다. 1971년 9월 3일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의 4대국 협정을 통해 서독과 서베를린 사이의 자유통행을 보장하고, 서베를린의 서독 귀속을 국제적으로 승인하기로 했다.⁵³⁾ 1972년 12월 21일에는 동서독 기본조약이 체결되었다.⁵⁴⁾ 이듬해 동서독은 나란히 국제연합에 가입하였다. 같은 해인 1973년에는 서독과 체코슬로바키아 간에 프라하 조약이 체결되었다.⁵⁵⁾

동방정책이 진행되면서 서독과 소련은 유럽안보협력회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CSCE)의 창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에 합의하였다. 서베를린 문제 해결을 위한 4강 협정이 유럽안보협력회의 창설의 기초가 되게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⁵⁶⁾ 유럽안보협력회의의 창설 이것은 브란트의 동방정책 목표 중 중대한 것 중의 하나였다. 그는 집단 안보 협력 체제인 이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의 창설을 위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⁵⁷⁾ 유럽안보협력회의는 유럽 전체의 통합을 위한 평화 체제 혹은 그 전 단계로의 진전을 견인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는 동방정책의 실현을 위해 주요한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체제였다. 따라서 이의 결실 과정은

52) *Ibid.*, pp. 47-52.

53) *Ibid.*, pp. 60-63.

54) *Ibid.*, pp. 63-66.

55)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브란트가 꿈꾸던 바 동방정책의 실현을 통해 서독이 국제정치의 종속 변수에서 주체적 요소가 되고 있음을 웅변해 준다고 하겠다. 국제 분쟁의 중심에서 평화의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56) 브란트가 보기에 서베를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승 4개국이 협력하는 것은 서베를린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동서 냉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 구조를 창출해 내는 과정이 될 수 있었다. 동방과 서방 전체를 아우르는 평화·협력 체제를 구축해 갈 수 있는 기초를 수립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었다. 서베를린 문제의 해결은 동방정책을 서독과 서방 세계에서 받아들여지게 하는 현실적 결과물이 될 수 있었다. 여기에서도 역경을 성공의 지렛대로 만드는 생의 전략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절에서 설명하듯이 김대중은 한반도에 대한 4대국 보장 논을 6자회담으로 발전시키고 이것을 동아시아 안보·협력 체제의 기초로 삼고자 하였다. 브란트의 경우와 매우 유사하다.

57) Wilfried Loth, "The road to Vienna: West German and European security from 1969 to 1973", Wilfried Loth and Georges-Henri Soutou (eds.), *The making of Détente. Eastern and Western Europe in the Cold War, 1965-75* (London and New York, 2008), pp. 153-167.

냉전 시대를 극복할 중대한 역사 과정이었다.⁵⁸⁾ 브란트는 유럽 안보협력회의에 미국과 캐나다가 동참해야 함을 역설하여 관철시켰다. 이는 그가 독일 분단의 극복, 유럽 전체의 평화와 통합문제가 세계 차원으로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 진전과 더불어 동서독 사이의 기본조약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다. 서독은 동독에 많은 지원을 하게 되었고 동서독 관계는 내독 관계로 처리되어 동독은 또한 유럽공동체 (EC)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경제교류는 물론 인적교류가 활발히 진척되었다. 정년퇴직자들이 동서독 사이에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게 되었고, 동독인들이 정년퇴직 전에도 허가를 받아 서독에 있는 친척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 서독인들이 허가를 받아 자가용으로 동독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 동서독 적십자 활동을 통한 이산가족 상봉이 추진되었다. 신문·잡지·방송의 교류를 통해 정보의 소통이 이루어졌다. 동서독 간 도로 철도 등의 인프라가 확대·개선되었다. 접근을 통한 변화의 기초가 마련되었고,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가 전파될 수 있게 되었다. 동독은 여러 차단정책을 통해 이를 막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정책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동독 사람들의 머리와 가슴에 서서히 스며들었기 때문이다.⁵⁹⁾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동방정책을 통해 독일은 영토의 축소를 받아들여야 했고 두 개의 독일이라는 분단을 인정했다. 그러나 독일인들은 이 기반위에서 두 독일 간의 특수한 형태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교류·협력을 통해 통일로의 길을 닦고자 했다. 이러한 기반과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독일 통일은 재통일이 아니라 새로운 독일의 탄생을 의미했다. 브란트는 독일의 재통일이라는 개념을 강력히 반대했다.⁶⁰⁾ 이러한 분단 극복 과정은 진정한 과거청산에 기초하며 유럽 지역의 평화와 세계평화체제의 구축에 기여하는 것이었다. 브란트는 동방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그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브란트의 동방정책의 성과는 그의 후계자인 슈미트 (Helmut Schmidt) 수상에 의해 계승되고 1982년 기민당-기사당-자민당 연립정부로의 정권교체 후에도

58) Bundeskanzler-Willy-Brandt-Stiftung (eds.), *op. cit.*, pp. 59-60.

59) *Ibid.*, pp. 75-78.

60) Willy Brandt, *Willy Brandt Erinnerungen*, pp. 199-200.

계승되었다. 이는 동독 및 동구권을 변화시키고 독일통일을 달성하는데 근본 구조와 동력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독일통일은 유럽연합의 형성과 함께 상호 작용 속에서 진척되고, 동구권을 국가들을 포함하는 유럽연합의 확대가 이루어 졌다. 브란트가 생각하던 서유럽통합이 유럽전체의 통합으로 질적 변화를 하면서 독일이 통일되었다. 브란트의 종합적인 해결 방안인 동방정책이 역사로 이어지면서 결실을 맺은 것이었다.

2. 김대중의 햇볕정책과 동아시아 및 유라시아 공동체 비전

1) 3단계 통일방안과 햇볕정책의 정립과 추진 그리고 동방정책의 영향

김대중은 6·25 한국전쟁을 경험하면서 전쟁의 잔혹성을 경험했고 그만큼 평화의 가치를 더욱 깨달았다. 민족의 분단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무력사용은 불가하며 평화적으로 통일을 달성해야 한다고 생각했다.⁶¹⁾ 그러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서로를 인정하고 평화적으로 교류·협력하면서 점진적으로 통일을 달성해야 했다. 이를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뜻에서 그는 3단계 통일방안을 구상하였다.

그는 1970년 당시의 야당인 신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정되면서 평화적 공존, 평화적 교류, 평화적 통일 이라는 3단계 통일방안을 정책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는 1971년 2월 3일 미국 내셔널프레스 클럽 회견에서 이 3단계 통일 방안을 설명하면서 국제적인 조명을 받았다. 이러한 뜻에서 그는 이미 1966년 7월 1일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통해 할슈타인 원칙⁶²⁾ 폐기와 동유럽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⁶³⁾ 당시 할슈타인 원칙을 폐기하자는 것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자

61) 이는 그가 정치에 투신할 결심을 하게 하는 한 동기가 되었다고 한다. 김대중은 국회의원으로 서 베트남 전쟁에 한국군을 파견하는 것을 반대했다.

62) 앞에서 설명한 할슈타인 원칙을 남한의 이승만 정부가 서독으로부터 채용하여 북한과 외교관계를 갖는 어떠한 국가와도 외교관계를 갖지 않았다.

63) 국회사무처편, 『제57회 국회회의록』, 제 13호, p. 8; 아태평화재단 (엮음);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남북연합을 중심으로』 (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0), p. 295. 앞에서 설명했듯이 서독의 자유민주당 소속 솔베르 의원 등이 1962년 이후에 주장한 할슈타인 원칙 포기 및 동독 및 동유럽과의 교류와 화해 논리를 김대중은 언론 보도를 통해 그리고 1966년 그곳 방문을 통해 접하고 깊이 공감했다. “지난번에도 서부 독일의 사민당 대표가 동부 독일 카를 마르크스 시(市)에 가서 동부 독일의 대표들과 통일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수일 전 신문을 보면 서부 독일의 연립내각에 참여하고 있는 자유민주당은 통일 후에 소련군의 주둔을 허용

는 것인데 한국전쟁이 끝난 뒤 불과 13년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많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정책 제안이었다. 당시는 북한을 ‘괴뢰 도당’이라고 부르고 6·25의 기억이 생생하던 때였다. 또한 남한 정부의 한국에 대한 유일대표권을 주창하던 시기에 평화통일을 주장한다는 것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여 남한의 이 유일대표권을 부정하는 논리로 해석될 수 있어서 반국가 행위로 규정될 정치·사회적 위험성을 안고 있었다.⁶⁴⁾

그는 평화적 공존의 구체적 틀로서 남북한이 동시에 UN에 가입하는 것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⁶⁵⁾ 이 제도적 틀을 통해 남한과 북한이 서로를 인정하면서 대화와 교류를 실시해 가는 것을 구상했다. 그는 서독에서 동방정책이 실현되는 가운데 동서독이 동시에 UN가입을 추진하는 것을 보고 그의 신념을 보다 확고히 했다.⁶⁶⁾ 1972년 7·4 공동성명이 발표된 후인 7월 13일에 남북한 동시 유엔가입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⁶⁷⁾

그는 경제 분야의 교류·협력을 중시하였고 정경분리 원칙을 주장하였다. 경제 교류·협력을 위해서 기업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주체가 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정부가 통일정책을 독점해서는 안 되며 활발한 시민들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71년에 합의된 남북한 적십자 회담과 이산가

할 용의가 있다든가, 혹은 통일이 된 후에도 공산당을 합법화할 용의가 있다든가, 이런 등등의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1966년 7월 1일, 국회본회의 대정부질의 중에서 국회사무처 편, *op. cit.*, p. 8.; 김대중, "후광 김대중 대전집", 『통일논집』, 제3권 (중심서원, 1993), pp. 21-22. 김대중이 국회의원으로서 유럽을 방문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러한 대정부 질문을 하는 것을 보면 그의 견해가 서독에서 진행되는 것들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전후의 맥락을 볼 때 이는 김대중의 독자적인 사유체계에 하나의 현실적인 참고 사항이 된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것을 참고하여 단순하게 발언하기에는 이 발언이 갖는 당시 위험성이 너무나 컸다는 점에 비추어 봐도 그렇다.

64) 김대중의 이러한 주장을 빌리 브란트가 외무부 장관으로서 동방정책을 추진하면서 할슈타인 원칙을 폐기할 것을 주장한 것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브란트가 외무장관이 된 것은 1966년 12월이기 때문에 김대중의 발언은 브란트가 외무장관이 되기 이전의 것이다.

65) 아태평화재단 (편), *op. cit.*, p. 295.

66) 김대중은 1972년 5월 독일을 방문하여 동서독의 동시 UN 가입문제의 진행과정에 대해 상세히 파악했다. “내가 이번에 듣고 온 이야기입니다만 명연에는, 아마 4월쯤 4대국이 독일에 대한 전쟁종결선언(戰爭終結宣言)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아마 명년 9월 유엔 총회에서는 동서양독(東西兩獨)이 유엔에 가입하게 될 것입니다.” 1972년 6월 6일 서울 홍사단 강연 중에서, 김대중, "후광 김대중 대전집", 제3권, 『통일논집』, p. 98.

67) 『조선일보』, 7월 14일; 아태평화재단 (편), *op. cit.*, p. 298.

족 상봉 추진에 적극 동의하였다. 그는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 평화적으로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런데 이러한 단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민주화가 제대로 이루어져 민주적 제도 속에서 경제·경제·사회 발전을 이루고 통일을 추진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에서 말한 ‘선 민주화 후 통일’ 론을 개진했다.

그는 자신이 개발한 통일정책 구상이 보편타당성을 가진다는 점을 서독에서 빌리 브란트가 실시하는 동방정책에서 확인하였다. 김대중은 1971년 2월 3일 미국 내셔널프레스 클럽 회견에서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을 지지함을 선언했다. 김대중은 또한 독일의 사례를 보면서 경제 교류·협력은 단순히 경제적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신뢰를 쌓아가는 사회 통합의 중요한 전인차가 됨을 확신했다. 이 측면을 그는 서독의 동방정책 추진과 그 이후의 동서독 관계에서 확인했음을 후에 다음과 같이 술회했다. “서독의 브란트(Brandt) 수상이 1969년 동방 정책 이후 꾸준히 추진했던 동서독간의 교류·협력이 상호 신뢰 기반 조성에 기여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⁶⁸⁾ 그는 자신의 통일정책을 정립해 가면서 브란트의 동방정책을 타산지석으로 참고할 뿐만 아니라 또한 브란트와 교류하면서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갈 수 있었다.

김대중의 3단계 통일 방안은 끊임없이 용공시비에 휘말렸다. 그는 3단계 통일 방안을 실현하는 전제조건으로서 강력한 안보태세와 한미동맹을 비롯한 우방과의 결속을 중요시 하였지만 용공시비에 의한 박해와 시련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런데 1972년 10월부터 박정희 독재정권의 영구집권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유신체제가 실시되면서 그는 이에 정면으로 저항했다. 그의 이러한 유신체제 비판 활동은 그의 신변을 직접적으로 위협했다. 이러한 박해의 시기에 그는 서독 동방정책의 지도자인 브란트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상호 정치사상적 교류를 시작하였다. 1973년 8월에 그는 한국 중앙정보부에 의해 일본에서 납치되었고, 이 사건을 접한 빌리 브란트는 김대중 구명운동에 적극 나섰다. 브란트는 이 사건을 통해 한국의 김대중이라는 인

68) 아태평화재단 (편), *op. cit.*, p. 145. 1999년 12월 9일 가쿠마 다카시 전 NHK 기자가 김대중 대통령과 수행한 인터뷰에서 가장 큰 감명을 받은 사람을 물었을 때 김대통령은 이에 대한 대답에서 빌리 브란트를 몇 사람과 함께 꼽았다 “이 분은 내가 고난에 처해 있을 때 20여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나와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한결같은 지원을 해 주신 분입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독일의 통일에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고심하고 있는 내게 많은 영감을 주신 분입니다.” 가쿠마 다카시 지음 (추성훈 옮김), 『아시아의 리더 김대중 대통령』 (서울: 창작시대, 2000), p. 289.

물과 그의 민주화운동 그리고 통일노력에 대해서 크게 주목하게 되었다.⁶⁹⁾ 그 이후 두 사람은 서신왕래를 통해 민주주의와 통일문제에 대해 의견 교환을 이어갔다. 1980년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에 의해 사형선고를 받았을 때도 빌리 브란트는 그의 구명을 위해 적극 나섰으며 이 이후에 두 사람은 더욱 깊은 정치사상적 교류를 펼쳐갔다.⁷⁰⁾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김대중의 3단계 통일 방안은 빛을 보기 시작했다. 앞장에서 설명한 그의 ‘선 민주화 후 통일’의 슬로건이 또한 큰 가치를 발휘하기 시작했다.⁷¹⁾ 특히, 1988년부터 집권한 노태우 정권이 교류 협력과 관계 정상화를 통해 북한을 비롯한 북쪽의 공산 정권들을 변화시키겠다는 북방정책을 실시하면서 김대중의 통일에 대한 그동안의 사상들의 가치가 제대로 조명되기 시작했다.

김대중은 1988년부터 실시된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을 지지했다. 그는 7·7 선언, 교류협력법, 한민족공동체 선언, 남북기본합의서 등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북방정책이 국민들의 민주적인 참여 속에서 진행되지 않고 정부가 독점함으로써 정권의 정치적 목적과 연계되고 성급한 흡수통합 정책에 초점을 맞추는데 우려를 표했다. 특히, 북방정책이 중국과 소련과 관계개선을 통한 북한 고립화 정책에 더 역

69) 김대중은 브란트의 동방정책에서 교류협력을 통한 통일문제에 눈을 뜬 것이 아니라 자신이 구상해 오던 것과 유사한 분단극복 정책이 브란트에 의해 서독에서 실시되는 것을 보고 비상한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김대중은 이미 1966년 7월 할슈타인 원칙 폐기를 주장하였으며 3단계 통일 방안을 연구하고 다듬어 왔다. 이러한 비상한 관심 속에서 그는 브란트 개인의 삶과 정치철학 정치여정에 대해서도 깊이 살펴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1973년 동경 납치사건 시 브란트의 적극적인 구명운동을 통해 개인적인 유대감을 크게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기억하고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그의 자서전에서 도 술회했다. 김대중, 『김대중 자서전 2』, p. 240.

70) 이 당시의 주고받은 서한들이 독일 사민당 빌리 브란트 기록보존소와 한국의 김대중 도서관에 보존되어 있다. 사민당 빌리 브란트 기록보존소의 경우 AdsD, WBA, A 11.1, Mapped 91.

71) 1987년 민주화이후부터 브란트와 그가 이끄는 서독의 사민당은 김대중을 노벨평화상 후보자로 매년 추천하였다. 1989년 10월 빌리 브란트가 한국을 방문한 길에 김대중과 만나 많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당시에 동독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브란트는 급히 귀국하였다. Dae-jung Kim, "Willy Brandt and Me: *Ostpolitik* and the Sunshine Policy", Keynote Lecture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with the theme "The Vision of an East Asian Community and the Tasks of Korean Unification viewed from the Experiences of the European Integration and German Division and Unification", hosted by the Institute of History and Culture of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eoul, May 20-23, 2009.

점이 주어진다고 판단하고 문제제기를 하였다.⁷²⁾

김대중은 독일통일 과정을 목격하면서 흡수통일의 문제점을 절실히 인식했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이듬해 동독이 서독에 흡수되는 형태로 독일이 통일되었다. 이 흡수통일로 인해 통일 후 독일은 크나큰 경제·사회적 시련을 겪어야 했다.

김대중은 1991년 독일을 방문하여 통일현장을 살펴보고 독일의 지도자들과 요담하였다. 특히 빌리 브란트 수상과 면담에서 조급하게 진행된 흡수통합의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때에 브란트는 김대중에게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하였다: “당신들은 참 행복하다, 통일을 우리 다음에 하게 되어서 우리가 겪은 모든 어려움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⁷³⁾

이러한 독일의 통일 후유증을 보면서 김대중은 그의 3단계통일 방안의 가치에 대해 더욱 확신하게 되었고 흡수통합을 피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갑작스러운 북한의 붕괴와 이를 흡수하는 통일과정은 너무나 큰 부담과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그는 시간을 두고 점차 3단계 평화 통일 정책을 기존의 것과 다르게 다듬어 나갔다. 그는 동유럽 사회주의권이 몰락하고 독일이 통일된 후인 1991년 기존의 3단계 통일 방안인 평화적 공존, 평화적 교류, 평화적 통일을 3대 통일 강령으로 개편하고 공화국연합제, 연방제, 완전통일의 단계라는 3단계를 새로이 정립했다. 3원칙으로 자주·평화·민주에 의거한 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⁷⁴⁾

1994년 9월 아태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하였을 때 그의 3단계 통일정책을 햇볕정책으로 명명하여 설명했다. 이것이 햇볕정책 용어 사용의 시작이었다.⁷⁵⁾ 햇볕정책은 이습우화에서 바람보다는 햇볕이 지나가는 행인의 옷을 벗겼듯이 대북 압박보다는 교류와 협력이 북한 사회를 변화시킬 것으로 보는 신념에 기초했다. 그는 북한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지식·정보 사회의 개념과 소통매체를 전파하

72) Meung-Hoan Noh, “The Impacts of the *“Berliner Mauerfall”* and the Unification of Germany on the Tasks of Korean Unification: Focused on the Northern Policy of Roh Tae-woo and the Sunshine Policy of Kim Dae-jung”, 『역사문화연구』, pp. 601-602; 김용현, “노태우 정권 시기의 통일론”, 『통일시론』, 5호, p. 143; 아태평화재단 (편), *op. cit.*, p. 301-302.

73) 김대중, 『나의 길 나의 사상』, p. 241.

74) 아태평화재단 (편), *op. cit.*, p. 297.

75) 김홍균·한기홍, *op. cit.*, p. 46.

고자 하였다.

햇볕정책은 남한의 민주주의 심화 그리고 북한의 변화와 더불어 3단계 통일 방안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그는 흡수통합 정책의 문제점을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적하고 햇볕정책은 흡수통합 정책이 아님을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햇볕정책이 흡수통합 정책으로 북한에 의해 오해되자 햇볕정책은 남북한 모두에게 고르게 햇볕을 비추게 하자는 의미라고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독일 통일 과정을 보고 남한에 의한 흡수통합 가능성에 대해 매우 민감해졌다.⁷⁶⁾ 김대중은 햇볕정책이 흡수통합 정책이 아님을 1998년 대통령 취임연설에서도 분명히 하였다.⁷⁷⁾

그런데 그는 햇볕정책이 갑자기 자신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그 뿌리가 7·4 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⁷⁸⁾ 그는 정부 차원의 그동안의 통일 노력들, 북한과 이루어진 협약들을 정과에 관계없이 계승하고 있음을 뚜렷하게 보여주었다.⁷⁹⁾ 그는 남북 간의 신뢰 회복과 강화에 우선적인 초점을 맞추었다. 그는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대북 경제 사업을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민간인이 주도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해 주는 형태로 추진했다. 특히 현대가 정주영의 소떼 방문에 힘입어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사업을 개발했다. 이러한 현대는 김대중의 햇볕정책 실시에 큰 힘이였다. 물론 그 힘은 앞에서 설명한 자민당이 브란트에게 제공해주었던 것과는 비교될 수 없이 작은 것이었지만 이제 그러한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정책을 시작한 것이었다. 경제 분야를 필두로 기술, 사회, 문화 분야에서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적극 추진했다. 김대중은 햇볕정책을 추진하면서 미국의 클린턴 정부와 긴밀한 협조 속에서 했다. 브란트가 미국을 비롯 서방 동맹국들과 긴밀한 협의 속에서 추진했던 것과 유사하다. 국내적으로는 인권위원회 신설, 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노사정위원회 상설화 등 제반의 민주화 정책들을 실현했다.

햇볕정책을 실천하는 가운데 그는 6·15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본격적으로 햇볕

76) 백학순, "대남전략",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편), 『북한의 국가전략』 (서울: 한울 아카데미 2003), pp. 146-218, 183-184.

77) 통일부, 『국민의 정부 5년: 평화와 협력의 실천』, pp. 10-11.

78) 김용현, "북한 내부정치와 남북관계: 7·4, 남북기본합의서, 6·15 비교",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 43호 (2004년 하반기호), p. 287.

79) 백학순,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세종정책연구』, 제 5권 1호 (2009), p. 307-308.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⁸⁰⁾ 2003년 집권한 같은 당의 노무현 정부에 의해 햇볕정책과 6·15 남북 공동선언은 10·4 공동선언으로 계승되었으나 2008년 한나라당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햇볕정책은 부정되고 6·15와 10·4 공동선언은 거부되었다. 1982년 기민당(CDU)으로 정권이 바뀌면서도 동방정책이 계승되었던 점과 대조를 이루었다.

2) 동아시아 다자간 안보체제

1970년 10월 16일 대통령후보로서의 기자회견에서 통일·외교 정책과 관련하여 김대중은 미·중·소·일 4대국의 한반도에 대한 전쟁억제 보장, 소위 4대국 안전보장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⁸¹⁾

김대중은 일찍부터 동서진영의 교류와 협력에 관심을 갖고 4대국(미국, 소련, 일본, 중국) 보장 하에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평화통일을 달성할 것을 생각해 왔다. 그는 이 생각을 초지일관 발전시켜 왔다.⁸²⁾ 그런데 후에 그는 이 4대국 보장론은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의 개념과 연계해서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는 일찍이 유럽의 집단안보체제가 발전하는 것을 보고 지역의 다자간 안보체제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1972년 1월 30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유럽에서 전개되고 있는 집단안보체제 수립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유럽 국가들

80) 김대중은 북한이 6·15 정상회담에 임하는 데는 중국의 지지가 작용했다고 본다. 중국이 북한에게 정상회담에 응해도 흡수통합의 화근이 되지 않도록 중국이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했을 것이라고 본다. 김대중은 그의 자서전에서 리관유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이러한 그의 견해를 비친다. 김대중, 『김대중 자서전 2』, p. 241-242. 이는 동방정책에서 소련의 역할과 햇볕정책에서 중국의 역할을 비교해서 면밀히 봐야 할 근거를 제시해 준다. 빌리 브란트와 김대중은 공히 그들의 정책을 위해 소련과 중국의 가치를 간과하고 있었다고 보여 진다.

81) 이러한 정책 대안들은 당시 유권자들에게 큰 호소력을 가졌다. 미 국무부의 정보조사국의 보고서 내용은 이를 확인해 준다. “일반적인 한국인과 달리 김대중과 그의 지지자들은 이슈를 가지고 선거를 치렀는데, 현상 유지를 반대하고 유권자들에게 대안을 제시하면서 정부 정책과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였음. 이 제안들은 선거판을 휘잡았고 신민당의 대중적 평판은 부쩍 좋아졌음.” 이흥환, 『미국 비밀 문서로 본 한국 현대사 35장면』 (서울: 도서출판 삼인, 2002), p. 137.

82) 1999년 5월 말 러시아를 국빈 방문하고 나서 김대중은 다음과 같이 토로했다: “4강 외교는 국민의 정부 출범 1년 4개월 만에 한 매듭을 지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1971년에 4대국 한반도 평화보장론을 주창한 바 있는 나로서는 실로 28년 만에 그 테두리를 마련한 셈이다.” 김대중, 『김대중 자서전 2』, p. 182.

에서는 새로운 시대가 분명하게 도래하고 있다. 미국과 소련 사이에 평화공존이 작동되고 있고 독일, 영국, 프랑스 그리고 다른 유럽 국가들이 동과 서 사이에 대화를 시작하는데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유럽인들은 유럽 공산국가들을 참여시키는 범유럽 집단안보체제를 결성하는 가능성을 타진하는 상황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⁸³⁾ 그는 이러한 집단안보체제 및 유럽통합이 독일의 분단 극복에 크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이러한 발전과정에 주목했다.⁸⁴⁾ 그는 실질적으로 1990년 독일통일이 이루어 졌을 때 ‘유럽안보협력회의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CSCE)’가 대단히 큰 역할을 해왔고 또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는 이러한 관찰을 기반으로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를 구상했다. 햇볕정책은 이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와 동전의 양면관계를 형성해야 했다. “‘3단계 통일론’이 추구하는 다자간 안보협력의 형태는 헬싱키 협정 (Helsinki Accords)을 채택한 유럽안보협력회의 (CSCE)와 유사하다. 즉 동북아 다자간안보협력체는 동북아에서의 군사, 경제 그리고 인류 공동체적이고 문화적인 차원에서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 안보체제이자 협력체제이다.”⁸⁵⁾ 김대중이 CSCE 성립 과정을 매우 유심히 추적했음을 CSCE 회담의 핵심을 짚는 아래의 언급에서도 알 수 있다. “특히 인권과 자유의 보장 문제는 과거 CSCE 내에서 동서 진영 간 갈등을 야기시켰던 문제로서, 그 경험을 교훈 삼아 신축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⁸⁶⁾

그는 후에 4대국 한반도 보장 논의의 의미를 6자회담의 장기적 목표와 연계하면서 지역공동체 발전의 기초로 상정하였는데 위에서 말한 일관성이 확인된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그는 유라시아 지역 차원으로의 공동체 발전을 내다보기도 했다. “제가 71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것이 ‘4대국 한반도 평화보장’입니다. 4대국에 남북을 합친 것이 지금의 6자회담입니다. 주변국과의 관계를 잘 풀어나가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6자회담이

83) 'The Gist of my Maintenance', PA AA, B37/684, Meung-Hoan Noh, "Ostpolitik and Korean South-North Relations", Carole Fink and Bernd Schaefer (eds.), *Ostpolitik, 1969-1974. European and Global Respons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pp. 148-162, 151에서 재인용.

84) 임동원, 『피스메이커. 남북관계와 북핵문제20년』, (서울:중앙 books, 2008), p. 335.

85) 아태평화재단 (편), *op. cit.*, p. 122.

86) *Ibid.*, p. 124.

성공하도록 성실히 돕는 게 최선의 길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소외되지 않으려면 우선적으로 남북관계가 좋아야 하고, 한미동맹관계도 확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가 해결되면서 남북관계가 발전하고, 이것이 동북아 안보체제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북을 잇는 철도가 북한을 거쳐 중국, 시베리아, 중앙아시아, 유럽까지 들어가야 합니다.⁸⁷⁾ 앞에서 보았듯 이러한 그의 햇볕정책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푸는 정책적 비전은 브란트가 서베를린을 위한 4대국협정과 이를 기반으로 유럽의 집단안보체제를 구축하려 한 발상과 매우 유사하다.

3) 동아시아 및 유라시아 공동체 추진과 분단극복

1960년대 초 김대중은 한일국교정상화에 찬성했다. 그는 당시 이것이 일제시대의 과거사에 대한 철저한 청산을 전제로 원칙에 맞게 이루어 져야하고 지역의 평화와 협력을 견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 자당 내의 인사들과도 갈등을 빚었다.⁸⁸⁾ 필자는 이 측면이 앞에서 설명했듯 빌리 브란트가 사민당의 대부분이 반대한 아테나위의 서유럽통합 정책에 찬성했던 매우 유사성을 띠었다고 본다. 이러한 유사성은 브란트와 김대중 두 사람이 과거청산을 하면서 이웃 국가와 화해하고 지역의 평화와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는 신념의 공통점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1993년 캠브리지대학교 유학시절을 통해 김대중은 동전의 양면으로서의 유럽통합과 독일통일의 관계에 대한 보다 깊은 인식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곳에서 저는 독일통일에 대해 나름대로 연구하고 직접 통일 독일의 현장을 수차례 방문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유럽의 연방제를 지향하고 있는 유럽통합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각국의 지도자들과도 폭넓은 대화를 나누어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⁸⁹⁾ 김대중은 서독의 지도자들이 통일된 독일이 유럽통합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방 국가들을 설득하는데 성공했다고 파악했다. 그는 그 관계의 논리를 담은 서독 지도자들이 호소를 다음과 같이 전했다. “미국·영국·프

87) 2008 김대중 전대통령 연설·회견자료집, 김대중평화센터 자료/ No. 012, p. 152.

88) 김대중, 『김대중 자서전 1』, pp. 162-168.

89) 김대중, *op. cit.*, p. 195.

랑스 등 서방국가들에게는, 우리 통일 독일은 반드시 NATO에 남겠다, EC를 강화시켜 통일 독일을 이 경제통합체의 일원으로 참여시키는 데 적극 협력하겠다, 그리고 통일 독일은 장차 실현될 통합 유럽의 한 일원이 될 것이며 평등한 입장에서 모든 국가에게 겸손하게 봉사하겠다.”⁹⁰⁾ 이러한 유럽통합과 독일통일의 논리적 맥락에 대한 그의 인식은 그로 하여금 한국통일은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및 평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긴밀한 협력 내지는 공동체로의 발전 속에서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신념을 더욱 강하게 갖도록 만들었다. 역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의 에너지는 아태지역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아시아의 민주화를 추동할 수 있는 것으로 그는 보았다. 그는 남북문제의 해결과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평화와 상생의 상호 구조로서 동시에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러한 그의 인식은 1994년 1월 아태평화재단 설립의 도화선이 되었다. 그는 같은 해 12월 아시아민주주의 지도자회의(FDL-AP)를 창립하고 국제적 비정부기구(NGO)로 상설화하였다.⁹¹⁾ 이러한 한국 문제 해결방식은 또한 그가 생각해 온 세계의 평화와 인권, 복지 및 번영에 실천적인 초석이 될 수 있음을 인식했다. 이는 더 나아가 자연과 인간의 조화에 의한 지구의 환경 평화를 위한 지구민주주의의 현실적 기초가 될 수 있었다. 이것은 그가 언명한 그의 ‘신인도주의’ 사상의 뼈대였다. 앞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한국 역사의 시련을 초국가 민주주의 실현의 적극적 계기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1998년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는 아세안+한중일 회의에서 ‘동아시아비전 그룹(East Asian Vision Group)’과 ‘동아시아연구그룹(East Asian Study Group)’ 설립을 제안하였다.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n Summit, EAS)’의 상설 기구화를 제의하였다. ‘동아시아포럼(East Asian Forum)’의 정기개최를 제안하고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East Asian FTA, EAFTA)’ 설립을 제안하였다.⁹²⁾ 그리고 아시아태평양협력체(APEC)를 위한 활발한 활동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기구 활동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그는 또한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의 가치에 크게 주목하였다. 그는 장기적으로 동아시아를 넘어 유라시아 공동체 비전을

90) *Ibid.*, p. 239.

91) 아태평화재단(편), *op. cit.*, p. 305-306.

92) 김대중의 이러한 활동과 관련하여 그를 안중근 동양평화론의 계승자로 보는 관점들이 대두했다. 최태욱, "동양평화론의 21세기적 계승. 동북아에서 동아시아로", 안중근기념사업회(편), 『안중근과 동양평화론』 (서울: 도서출판, 2010), pp. 275-304, 302.

다듬기 시작하였다. 그는 아시아와 유럽의 협력체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공동번영의 세계 공동체 초석을 보았다. 아셈이 실질적으로 발전하는 가운데 남북한 철도가 연결되고, 이는 효율적으로 시베리아 철도로 그리고 유럽철도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었다. 유럽철도는 도버해협 해저터널을 통해 영국으로 연결되어 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해저터널이 개발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철도 연결은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철의 실크로드’가 개설되는 것을 의미했다.⁹³⁾ 그가 보기에 이 ‘철의 실크로드’는 ASEM의 발전을 역동적으로 추동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발전이 실현될 수 있다면 북한의 개방은 ASEM의 테두리 안에서 매우 안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었다. 북한과 러시아는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나진과 하산을 연결하는 철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철의 실크로드’는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그리고 유럽으로의 물류를 열어 개성공단 등 남북 경협사업을 국제적인 차원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었다.⁹⁴⁾ 그래서 김대중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철도를 연결하는 것에 대해 보다 큰 의미를 부여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2002년 9월 열린 제 4차 ASEM 회의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점을 역설했다: “지금 한반도에서는 매우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0년 6·15 남북 공동 선언의 합의가 이제 비로소 구체적인 실천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 착공된 남북한 간 철도와 도로 연결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군사적 긴장 완화의 의미가 큼니다. 남북간 군사 분계선의 철조망이 마침내 부분적이거나 제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북 간의 사회적·문화적인 상호 교류가 크게 증대되고 경제협력도 활성화됩니다.

남북한 간 철도 연결의 또 하나 의미는 유럽과 한국을 육로로 연결하는 ‘철의 실크로드’가 이룩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ASEM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도 다시없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⁹⁵⁾

이러한 유라시아 공동체 실현을 견인하는 기능주의적 동력으로서 그는 또한 ‘디지털 실크로드’를 구상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아시아와 유럽연합을 초고속 통신망으로 연결하는 ‘트랜스 유라시아 네트워크’ 구축을 제의하였다.⁹⁶⁾ 예를 들어, 그

93) 김홍균·한기홍, *op. cit.*, p. 79.

94) 김홍균·한기홍, *op. cit.*, pp. 78-81.

95) 김대중, 『김대중 자서전 2』, pp. 498-499.

96) 김대중, 『김대중 자서전 2』, pp. 238-239.

는 프랑스의 시라크 대통령을 만나 대륙을 잇는 네트워크는 전자상거래와 전자 무역의 채널로 활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시라크가 대통령이 이 의견을 적극 수용하였으며 같은 해 10월의 ASEM의제로 다루기로 합의하였다. 그는 2000년 서울에서 개최된 ASEM회의 석상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세계는 지금 대격변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20세기를 보내고 21 세기를 맞으면서 우리는 인류의 문명사에도 유례가 없는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유형적 물질 중심에서 인간과 지식 중심으로, 산업 사회에서 정보화와 생명 사회로, 영토 국가의 대립 시대에서 조화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향해 역사는 빠른 속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이제 아시아와 유럽이라는 지리적 구분조차 무색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⁹⁷⁾ 그는 회원국들의 지지를 받아 ‘디지털 실크로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2002년 9월 열린 제 4차 ASEM 회의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자신감을 표출했다. “그동안 ASEM이 추진해 온 아시아-유럽 간 ‘디지털 실크로드’의 완성은 이미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 관문이 될 한국과 프랑스 간의 초고속 정보 통신망이 지난해 12월 개통되었습니다. 이제 ‘철의 실크로드’까지 완성되면 아시아와 유럽은 하나의 협력 공동체를 향해 크게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⁹⁸⁾

그러면서 그는 유라시아 공동체를 위한 정체성의 근간을 확보하는데 많은 생각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그는 2000년 10월 고노 요헤이 일본 외상에게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모든 일에서 아시아와 유럽이 연결되는 것이 좋습니다. 본래 유럽이나 아시아라는 것은 과거 알렉산더 대왕 시대와 같은 때에는 보스포루스 해협을 동쪽을 소아시아라고 하였는데, 원래 대륙은 하나였으며 갈라져 있던 것이 아닙니다. 유라시아라는 입장에서 하나의 대륙 개념으로 협력해 나간다는 큰 시야를 갖고 문제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⁹⁹⁾ 이러한 신념에서 김대중은 특별히 더욱 ASEM회의들의 성공을 위해 전력투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러한 구상을 매우 일관되게 발전시켜 가는데, 대통령직 퇴임 후의 회견에서도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자주 피력했다: “우리는 지금 분단으로 인해 바다로만 가고 육지로는 못갑니다. 그러나 육지로 뻗어나가면 파리, 런던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물류비가 바다보다

97) 김대중, 『김대중 자서전 2』, p. 361.

98) 김대중, 『김대중 자서전 2』, pp. 498-499.

99) 김대중, 『김대중 자서전 2』, pp. 367-368.

20-30% 싸지고 시간도 절약됩니다. 미래 경제발전의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가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해서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동쪽의 거점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물류의 흐름이 한국을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물류가 일어나면 산업이 일어나고 금융이 일어납니다. 관광이나 문화산업도 일어납니다.”¹⁰⁰⁾ 이 구상에는 엄청난 과급효과 (spill over effect)의 개념이 들어 있다. 이러한 그의 구상과 제안에 대해 아시아는 물론 유럽의 많은 지도자들이 지지를 표방하였다. 특히,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횡단 철도와 한국철도를 연결시키는데 대단한 열의를 보였다.¹⁰¹⁾ 그의 유라시아 공동체 비전은 한반도 분단 극복의 과제, 지역평화 그리고 세계평화와 공동 번영의 문제를 초국가주의 사상과 기능주의 전략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달성하려 하는 구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가 보기에 세계의 역사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민족주의가 극복되고 세계화의 시대로 치달리고 있었다. 그는 이러한 역사의 추세에 맞추어 동아시아 집단안보체제, 동아시아공동체, 유라시아공동체, 민주주의의 세계화 등을 이루면서 한국의 분단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이러한 방식의 한국 문제 해결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지역공동체 세계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주요한 계기가 될 수 있었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 본 것처럼 빌리 브란트와 김대중 사이에는 그 삶과, 철학과 정책에 있어서 공통점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들이 면한 현실에는 구조적 차이가 있었다. 본고에서 필자는 그럼에도 그들의 동방정책과 햇볕정책의 내용과 그것을 실시하는 방법에는 그들의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사회정의에 대한 신념과 의지가 일관되게 흐르고 있다는 점을 조명했다. 이러한 가치관과 사상의 공통점이 두 사람을 교류하게 만들고 햇볕정책이 더욱 내실 있게 정립되는데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동방정책과 햇볕정책의 공통점은 근본적으로 여기에 기초했다.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민족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연구평화를 위한 초국

100) 김대중 전대통령 연설·회견자료집, No. 012 (김대중평화센터 자료, 2008), p. 152.

101) 김대중, 『김대중 자서전 2』, p. 413.

가주의 유럽통합 운동은 빌리 브란트에게 그의 정책 실현을 위해 중대한 우군의 토양으로 작용했다. 동독 및 동유럽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경제교류를 하면서 경제발전의 활력소를 찾고 분단을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기업인들 그리고 이들과 깊은 연계에 있는 자유민주당의 존재는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 추진을 위해 크나큰 구조적 힘이였다. 브란트는 동방정책을 통해 서독의 외교적 자율권을 확대할 수 있었다. 즉, 그는 경제적 거인이면서 정치적 난장이라는 서독의 상황에서 서독의 정치적 자주성을 크게 신장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요소들은 빌리 브란트가 독일이 진정한 과거거탄산을 통해 유럽과 세계의 일원이 됨으로써 유럽과 세계평화에 이바지 하고 유럽과 세계 공동체의 일원으로 분단을 극복하고 새로운 독일로 태어나야 한다는 신념을 실천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국가는 목적이 아니라 사람과 인권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제도라는 그의 초국가주의 신념과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교류를 통해 냉전 시대의 두 이질적인 체제가 상호 소통하며 화해를 이루어 내리는 기능주의 전략이 상승 작용을 하였다. 그는 동방정책의 우선적인 핵심이 서독 내의 민주주의 심화라고 보았고 이를 실천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면서 유럽적인 차원에서 동독과 동유럽에 대해 접촉을 통한 변화를 일구어 내며 독일문제를 해결하는 기초를 다질 수 있었다.

놀라우리만큼 김대중도 빌리 브란트와 유사한 신념과 세계관을 가졌다.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브란트보다 더욱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 했다. 그런데 김대중은 이러한 시련을 피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수양과 사회적 토양을 변화를 시키는 노력 속에서 극복하며 그의 정책 목표와 방법을 지속적으로 다듬어 가면서 추구했다. 이것이 햇볕정책의 지도자 김대중이 갖는 위대성이었다. 브란트의 동방정책이 독일통일과 함께 그 지향점을 실현했다고 한다면 햇볕정책은 미완의 상태로 머물러 있다. 정권교체와 더불어 그 계승이 부정됨에 따라 위기를 맞고 있다. 빌리 브란트와 김대중을 그리고 동방정책과 햇볕정책을 역사적 관점에서 비교하면서 한국과 동아시아에서 절실히 요청되는 것은 단힌 민족주의의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불행한 과거를 진솔하게 대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구조를 갖추는데 필요한 적극적인 의식을 함양해야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를 넘어서는 지역과 세계의 차원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사회정의의 넓고 깊게 뿌리내릴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남북 간의 적극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이 스스로 핵무기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북한 사회가 굶주리면서도 핵무기를 개발하며 폐쇄되기보다 국제 사회로 나와 자유와 민주주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추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평화적인 통일의 가장 현실적인 차원일 것이다.

〈참고문헌〉

- 국회사무처편. 「제57회 국회회의록」 (제 13호).
- 김대중. 『김대중 자서전1· 2』. 서울: 도서출판 삼인, 2010.
- _____. 『나의 길 나의 사상』. 파주: 한길사, 1994.
- _____. 『후광 김대중 대전집3·4』. 중심서원, 1993.
- 김대중 전대통령 연설·회견자료집. 김대중평화센터 자료/ No. 012, 2008.
- 김옥. 『김대중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 인물과 사상사, 2005.
- 김용현. “노태우 정권 시기의 통일”. 청명문화재단편. 『통일시론』. 5호 (1999, 12).
- _____. “북한 내부정치와 남북관계: 7·4, 남북기본합의서, 6·15 비교”.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 42호. 2004년 하반기호.
- 김진호. 『독일연방공화국의 동방정책과 동방무역 1969-1975. 데탕트 시기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과 대기업들의 동방무역 이해의 상호 관련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김홍균·한기홍. 『김대중, 희망을 위한 여정』. 서울: 도서출판 고즈윈, 2006.
- 노명환. “빌리 브란트”. 통합유럽연구회편. 『인물로 통해 본 유럽통합사』. 서울: 도서출판 책과 함께, 2009, pp. 287-308.
- 백학순. “대남전략”.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엮음. 『북한의 국가전략』. 서울: 한울 아카데미, 2003.
- 백학순.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세종정책연구』. 제 5권 1호, 2009.
- 아태평화재단 (엮음).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남북연합을 중심으로』. 서울 : 도서출판 한울, 2000.
- 이흥환. 『미국 비밀 문서로 본 한국 현대사 35장면』. 서울 : 삼인, 2002.
- 임동원. 『피스메이커. 남북관계와 북핵문제20년』 서울 : 중앙 books, 2008.
- 채구묵. “한국통일을 위한 독일통일의 교훈” 『한국사회학』. 제 30집 겨울호, 1996.

최태욱. “동양평화론의 21세기적 계승. 동북아에서 동아시아로”. 안중근기념사업회
편. 『안중근과 동양평화론』. 서울 : 채륜, 2010.

통일부편. 『국민의 정부 5년: 평화와 협력의 실천』, 2003.

가쿠마 다카시 지음 (추성춘 옮김). 『아시아의 리더. 김대중 대통령』. 서울: 창작시
대, 2000.

조선일보. 7월 14일자.

Archiv der Gegenwart. Vol. 40, 1970.

AdsD, WBA, A 11.1, Mappe 91.

Akten zur Auswärtigen Politik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71.

Brandt, Willy. *Erinnerungen*. Frankfurt a/M. 1989.

Brandt, Willy. (translated by Joel Carmichael), *A Peace Policy for Europe*.
New York/Chicago/San Francisco, 1969.

Brandt, Willy. *Friedenspolitik in Europa*. Frankfurt a.M. 1968.

Bundeskanzler-Willy-Brandt-Stiftung (eds.). Berliner Ausgabe Band 6, *Willy
Brandt, Ein Volk der guten Nachbarn. Außen- und Deutschlandpolitik
1966-1974*. Bonn, 2005.

Heitmann, Clemens. *FDP und neue Ostpolitik: Zur Bedeutung der
deutschlandpolitischen Vorstellungen der FDP von 1966 bis 1972*.
Königswinter, 1989.

Hiepel, Claudia. "In search of the most common denominator. Germany and
the Hague Summit Conference 1969". *Journal of European Integration
History*, No.9 (2003).

Jacobsen, Hanns-Dieter. *Die Ost-West-Wirtschaftsbeziehungen als deutsch-
amerikanisches Problem*. Baden-Baden 1986.

Niedhart, Gottfried. "Revisionistische Elemente und die Initiierung friedlichen
Wandels in der neuen Ostpolitik 1967-1974". *Geschichte und*

Gesellschaft 28.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8.

Noh, Meung-Hoan. *Westintegration versus Osthandel. Politik und Wirtschaft in den Ost-West-Beziehung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49-1958*, Frankfurt a/M. 1995.

Noh, Meung-Hoan. "Ostpolitik and Korean South-North Relations". Carole Fink and Bernd Schaefer (eds.) *Ostpolitik. 1969-1974. European and Global Respons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pp. 148-162.

PA AA, B37/684.

Prittie, Terence and Willy Brandt. *Portrait of a statesman*. New York, 1974

Schmidt, Wolfgang. *Kalter Krieg, Koexistenz und kleine Schritte. Willy Brandt und die Deutschlandpolitik 1948 - 1963*. Westdeutscher Verlag 2001.

Schollwer, Wolfgang. *Der Weg zur Entspannung. Deutschlandpolitik der F.D.P. seit 1952*. Bonn, 1972.

Stent, Angela. *Wandel durch Handel?: die politisch-wirtschaftlichen Beziehunge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Sowjetunion*. Köln: Wissenschaft und Politik, 1983.

Wilkins, Andreas. "Westpolitik, Ostpolitik and the Project of the Economic and Monetary Union. Germany's European Policy in the Brandt Era (1969-1974)". *Journal of European Integration History* 5 (1999).

Texte zur Deutschlandpolitik (TzD) Bd. III, Fritz Rudolf Schultz: Begründung des FDP-Antrags für einen Vertragsabschluß mit der DDR.

(Abstract)

**Willy Brandt's Vision of European Community and *Ostpolitik* /
Kim Dae-jung's Vision of Eurasian Community and Sunshine
Policy -focused on the value views and ideas of the two figures-**

Meung-Hoan Noh

In this article I tried to discuss the *Ostpolitik* and the Sunshine Policy as the realizations of the ideas of freedom, peace, and democracy of the two figures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history.

Willy Brandt tried to solve the German Question within the vision of the whole European integration. He meant that the people of Europe had to preserve their identity to open the great perspective to the continent. He was of assurance that the states of Europe could solve their problems only in European dimension, not through the isolated policies. To his belief the reconciliation and integration of whole Europe had to include the German unification. For this historical process the German people had to redress their past truly. The true way to this was the real democratization of the two Germanies. Under democracy and for the democracy the two Germanies had to respect each other, reconcile, exchange, and cooperate mutually. That should change East Germany and East Europe. Here he saw the chance and future of new Europe, new Germany, and the unification of Germany. It was the logic of his *Ostpolitik*.

Kim Dae-jung developed the vision of the East Asian community and Eurasian community. He was of belief that the vision, will, and the real process of this kind of regional community could promote the improvement of the North and South Korean relations. At the same time he regarded the improvement of the North and South Korean relations as the basic condition for the realization of regional community. Under democracy and for the democracy the two Germanies had to respect each other, reconcile, exchange, and cooperate mutually. That should change North Korea. Here he saw the chance and future of Korea of unification. It was the logic of his Sunshine Policy.

Key words : Willy Brandt, Kim Dae-jung, Regional integration, *Ostpolitik*, Sunshine Policy

논문접수일: 2012. 1. 25 / 논문심사일: 2012. 2. 17 / 게재확정일: 2012. 2. 21

성명: 노명환
소속: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교수
C.P.: 010-2792-4318
E-mail: hoannoh@hanmail.net

